

05-17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II

IT시대의 디지털외교

2005. 2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김 상 배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IT시대의 디지털외교』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2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김 상 배

목 차

요약문	5
제1장 서론	9
제2장 IT시대 디지털외교의 부상	14
제1절 IT시대 외교과정의 변화	16
1. 정보기술과 정보혁명론	16
2. 외교과정의 변화	18
제2절 IT시대 외교영역의 변화	22
1. 정보기술과 권력론	22
2. 외교영역의 변화	25
제3절 IT시대 외교주체의 변화	29
1. 정보기술과 거버넌스이론	29
2. 외교주체의 변화	33
제3장 외교과정의 변화와 지식외교의 모색	37
제1절 선진국의 지식외교 추세	37
1. 미국의 지식외교 추세	37
2. 기타 선진국의 지식외교 추세	40
제2절 IT인프라와 외교정보의 디지털화	44
1. IT인프라의 구축	44
2. 외교정보의 디지털화	47
제3절 한국 지식외교의 모색	49
제4장 외교영역의 변화와 IT외교의 모색	53

제 1 절	선진국의 IT외교 추세	53
1.	미국의 IT외교 추세	53
2.	기타 선진국의 IT외교 추세	55
제 2 절	글로벌 IT질서 형성에의 참여	58
1.	기존의 IT 관련 국제기구 활동	58
2.	새로운 IT 관련 국제기구 활동	60
제 3 절	동아시아와 남북한 IT협력	62
1.	동아시아 IT협력의 현황과 전략	62
2.	남북한 IT협력의 현황과 전략	66
제 5 장	외교주체의 변화와 네트워크외교의 모색	68
제 1 절	선진국의 네트워크외교 추세	68
1.	미국의 네트워크외교 추세	68
2.	기타 선진국의 네트워크외교 추세	71
제 2 절	네트워크외교의 대내적 측면	75
1.	조직개혁과 업무정비	75
2.	정부 부처 간 공조체제 구축	76
제 3 절	네트워크외교의 대외적 측면	79
1.	최근 대외구상의 문제점	79
2.	네트워크국가 발상의 필요성	81
제 6 장	종합 및 결론	84
제 1 절	IT시대 디지털외교의 부상	84
제 2 절	디지털외교의 전략적 모색	90
참고문헌	95

표 목 차

〈표 3-1〉 외교 정보화 예산현황(2001~2004)	45
--------------------------------------	----

그 림 목 차

[그림 3-1] 외교정보시스템의 연계관리구조	46
[그림 5-1] 네트워크의 세 가지 기본형태	82

요 약 문

정보화시대 ‘외교분야의 혁명(RDA, Revolution in Diplomatic Affairs)’ 연구는 ‘비즈니스분야의 혁명(RBA, Revolution in Business Affairs)’ 연구나 ‘군사 분야의 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RBA가 1960년대 이래 전개되고 있으며 RMA도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던 데 반해 1990년대까지도 외교 분야에서는 정보화가 지체되었던 현실이 이 분야의 연구가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정치의 차세대혁명으로서 RDA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외교과정에서 기술과 정보와 지식이 갖는 의미를 재고케 하였으며 더 나아가 외교의 내용과 형식을 양적·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근대 외교의 기본전제들을 변화시킬 조짐마저 보여 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내용과 본질을 탐색하는 개념적 작업의 일환으로서 정보혁명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외교과정, 외교영역, 외교주체의 변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이 글은 정보화시대 외교의 변화를 개념화함에 있어 국제정치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권력(power)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보화시대 한국외교의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정보화에 대한 대응전략이라고 하면, 주로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산업을 육성하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경제·산업 위주의 발상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정보화 전략들은 대체로 국내적 차원의 관심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간혹 정보화 분야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IT 관련 통상확대와 기술협력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국제경쟁을 지원하는 활동 정도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화의 문제가 국내적 범위를 넘어서 급속하게

글로벌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종전에는 정보화와 무관하게만 인식되었던 외교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정보화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현재, 정보화는 경제·산업의 영역을 넘어서 세계질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태까지는 각 국가들에 의해서 국가적 부(富)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정보화가 추구되어 왔다면, 이제는 정보화가 역으로 국가들로 구성된 기존 국제체제의 기본성격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현재 세계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키워드로서의 정보화와 세계화가 최근 각별한 밀월관계를 내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종래의 경제·산업 중심의 발상에서 탈피하여 정보화의 세계정치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투영하려는 글로벌 외교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반복컨대 여태까지 한국은 정보화의 문제를 외교전략의 쟁점으로서 인식하는 데 매우 무디게 반응해 왔다. 예를 들어 한국외교는 기술·정보·지식 등의 변수가 가지는 외교전략적 함의에 대해 다소 편협한 수준의 이해를 드러내 왔으며, 외교분야의 정보화전략을 논하더라도 IT인프라를 깔고 정보기기들을 도입하는 좁은 의미의 ‘외교정보화’ 전략을 상정하였다. 한국 외교전략의 전반적인 기조는 ‘안보외교’와 ‘통상외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보화 분야의 외교전략은 독자성을 갖기는커녕 경제부처들이 주도하는 경제·산업전략의 셋방살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요컨대 지난 십여 년간 한국에 대외지향적인 경제·산업전략으로서의 ‘글로벌 IT전략’은 있었을지언정 정보화가 세계화와 만나는 교차로에서 구상된, ‘디지털 외교전략’에 대한 발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디지털외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화시대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냉철히 진단함으로써, 향후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산업화시대의 아날로그외교와는 달리 정보화시대의 디지털외교는 IT가 창출하는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넓은

영역과 보다 많은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복잡한 모습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외교의 핵심적 성격 중의 하나는 ‘지식외교(knowledge diplomacy)’의 부상에서 발견된다. IT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지식을 생산·활용·공유하는 과정이 외교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식외교의 장은 전통적인 외교영역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제3의 외교영역’으로서의 기술·정보·지식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소위 ‘IT외교(IT diplomacy)’ 또는 IT분야의 외교의 부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외교와 IT외교의 등장은 그 짝으로서 ‘네트워크외교(network diplomacy)’의 병행을 요구한다. 외교지식을 생산·활용·공유하는 활동이 더 이상 정부 내의 외교 전담 부서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독점될 수만은 없다는 점이 바로 네트워크외교가 지식외교 및 IT외교와 짝을 이루어 부상하는 이유이다. 요컨대, 정보화시대를 맞아 IT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 외교의 영역에서 ‘지식/네트워크’의 외교 전략을 국내외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하는 외교의 본질을 ‘지식외교’와 ‘네트워크외교’의 개념적 연계인 ‘지식/네트워크’로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외교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IT인프라의 구축과 외교정보의 디지털화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외교지식을 실질적으로 생산·활용·공유하는 지식외교의 구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적인 네트워크외교의 추진체계와 대외지향적 ‘IT허브국가론’의 현황과 한계들을 살펴봄으로써 지식/네트워크의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제공하였다.

제 1 장 서 론

최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이하 IT)의 발달에 따른 사회변화의 양상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을 ‘혁명(革命)’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소위 정보혁명의 도래는 정보를 생산하는 인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확산과 소비의 과정에도 지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정보혁명은 단순한 기술혁신과 정보 활용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과 제도의 형태 및 정치사회적 권력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체제의 전반적인 구조변동의 가능성마저도 열어 놓았다.¹⁾ 세계정치가 이러한 정보혁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미 기술·정보·지식은 세계정치 권력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부상하였으며 국가 간(또는 비국가 행위자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주요 대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정보혁명은 근대 이래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였던 국민국가의 위상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내용과 본질을 탐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정보혁명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하는 디지털외교(digital diplomacy)의 내용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화시대 ‘외교 분야의 혁명(RDA, Revolution in Diplomatic Affairs)’ 연구는 ‘비즈니스 분야의 혁명(RBA, Revolution in Business Affairs)’ 연구나 ‘군사 분야의 혁명(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RBA가 1960년대 이래 전개되고 있으며 RMA도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던 데 반해

1) Manuel Castells,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Malden MA: Blackwell, 1996); Frank Webster,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5)

1990년대까지도 외교 분야에서는 정보화가 지체되었던 현실이 이 분야의 연구가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²⁾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정치의 차세대 혁명으로서 RDA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외교 업무에서 기술·정보·지식이 갖는 의미를 재고케 하였으며 더 나아가 외교의 내용과 형식을 양적·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근대 외교의 기본전제들을 변화시킬 조짐마저 보여 주고 있다.³⁾

그런데 국내의 상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정보화⁴⁾에 대한 대응전략이라고 하면, 주로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산업을 육성하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의 경제·산업 위주의 발상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정보화 전략들은 대체로 국내적 차원의 관심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간혹 정보화 분야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IT 관련 통상확대와 기술협력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국제경쟁을 지원하는 활동 정도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보화의 문제가 국내적 범위를 넘어서 급속하게 글로벌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종전에는 정보화와 무관하게만 인식되었던 외교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정보화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2) David Ronfeldt and John Arquilla, "What If There is a Revolution in Diplomatic Affairs?" U.S. Institute of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 4, (February, 2000) <http://www.usip.org/vdi/vdr/ronarqISA99.html>

3) Jeffery R. Cooper,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lications for Content and Conduct." i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 The Magazine on Information Impacts. The Center for In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July, 2001) http://www.cisp.org/imp/july_2001/07_01cooper.htm

4) 정보화(情報化, informatization)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각기 다른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보화를 a) 신기술 패러다임, b) 정보산업화, c) 정보의 디지털화/지식화, d) 제도의 탈집중화, e) 탈근대화 등의 다섯 가지 층위를 모두 포괄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이해한다. 정보화의 개념적 구조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국형 정보화전략의 모색을 위한 시론," 『21세기 도약을 위한 세계화 전략: Upgrade Korea』 제8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2002. 10. 18)

실제로 21세기의 문턱을 넘어선 현재, 정보화는 경제·산업의 영역을 넘어서 세계질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⁵⁾ 다시 말해, 여태까지는 각 국가들에 의해서 국가적 부(富)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정보화가 추구되어 왔다면, 이제는 정보화가 역으로 국가들로 구성된 기존 국제체제의 기본성격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동력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현재 세계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키워드로서의 정보화와 세계화가 최근 각별한 밀월관계를 내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종래의 경제·산업 중심의 발상에서 탈피하여 정보화의 세계정치적 의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투영하려는 글로벌 외교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반복컨대 여태까지 한국은 정보화의 문제를 외교전략의 쟁점으로서 인식하는 데 매우 무디게 반응해 왔다. 예를 들어 한국외교는 기술·정보·지식 등의 변수가 가지는 외교전략적 함의에 대해 다소 편협한 수준의 이해를 드러내 왔으며, 외교분야의 정보화전략을 논하더라도 IT인프라를 깔고 정보기기들을 도입하는 좁은 의미의 ‘외교정보화’ 전략을 상정하였다. 한국 외교전략의 전반적인 기조는 ‘안보외교’와 ‘통상외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정보화 분야의 외교전략은 독자성을 갖기는커녕 경제부처들이 주도하는 경제·산업전략의 셋방살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요컨대 지난 십여 년간 한국에 대외지향적인 경제·산업전략으로서의 ‘글로벌 IT전략’은 있었을지언정 정보화가 세계화와 만나는 교차로에서 구상된, ‘디지털 외교전략’에 대한 발상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디지털외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보화시대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냉철히 진단함으로써, 향후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산업화시대의 아날로그외교와는 달리 정

5) 정보화와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서로는 다음을 참조. James N. Rosenau and J.P. Singh, (eds.)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Albany, NY: SUNY Press, 2002)

보화시대의 디지털외교는 IT가 창출하는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넓은 영역과 보다 많은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복잡한 모습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외교의 핵심적 성격 중의 하나는 ‘지식외교(knowledge diplomacy)’의 부상에서 발견된다. IT를 바탕으로 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외교지식을 생산·활용·공유하는 과정이 외교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식외교의 장은 전통적인 외교영역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제3의 외교영역’으로서의 기술·정보·지식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소위 ‘IT외교(IT diplomacy)’ 또는 IT분야의 외교의 부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외교와 IT외교의 등장은 그 짝으로서 ‘네트워크외교(network diplomacy)’의 병행을 요구한다. 외교지식을 생산·활용·공유하는 활동이 더 이상 정부 내의 외교 전담 부서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독점될 수만은 없다는 점이 바로 네트워크외교가 지식외교 및 IT외교와 짝을 이루어 부상하는 이유이다. 요컨대, 정보화시대를 맞아 IT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 외교의 영역에서 ‘지식/네트워크’⁶⁾의 외교전략을 국내외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정보화시대의 디지털외교의 개념과 전략을 외교과정의 변화와 지식외교의 부상, 외교영역의 변화와 IT외교의 부상, 외교주체의 변화와 네트워크외교의 부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디지털외교를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 근거를 도출

6) 필자의 ‘지식/네트워크(knowledge/network)’의 개념적 연계(nexus)는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지식(power/knowledge)’에서 힌트를 얻어서 고안되었다. 푸코가 권력/지식이라는 용어에서 지식을 근대적인 의미에서 권력에 종속된 도구의 의미로서 그리고 있다면, 지식의 생산·활용·공유의 과정이 특정한 권력담지자에 의해서 통제되기보다는 네트워크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보화시대의 특징을 그려내기 위해서 필자는 지식/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굳이 ‘네트워크/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지식/네트워크’라고 한 것은 지식 차원의 변화가 선행하여 발생함으로써 권력의 네트워크화를 야기하는 것이 현재 정보화의 특징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푸코의 권력/지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chel Foucault, *Power/Knowledge*, edited by M. C. Gordon(Brighton: Harvester, 1980).

하고, 이러한 인식을 좀 더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식외교, IT외교, 네트워크외교의 세 가지 개념들을 제시하여 이후 논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보혁명의 도래에 따른 외교과정의 변화와 지식외교를 살펴보았다. 외교정보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외교업무의 디지털화, 인터넷의 활용 등이 기존의 외교과정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친 영향을 선진국의 사례에 의거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지식외교와 관련하여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T인프라의 구축과 외교정보의 디지털화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외교지식을 실질적으로 생산·활용·공유하는 지식외교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술·정보·지식이 새로운 권력자원으로 등장하면서 야기된 외교 영역의 변화와 IT외교를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안보와 통상의 영역을 넘어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외교의 영역을 특히 동아시아 지역협력외교와 한국외교의 맥락에서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정보화시대를 맞아 공공외교가 특히 주목받게 되는 배경을 논의하였다. 또한 글로벌 IT협력 또는 IT분야의 세계질서 형성에 참여하는 외교활동 및 동아시아와 남북한 간의 IT협력 문제도 디지털외교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정보혁명의 진전에 따라 야기되는 외교주체의 변화와 네트워크외교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의 국제정치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국가 행위자 중심의 외교에 비(非)국가 행위자들이 새롭게 참가하게 되는 과정을 정보화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또한 지식외교와 IT외교의 부상에 대응하여 네트워크외교를 구현하기 위한 국내추진체계의 현황과 과제도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네트워크국가의 대외적 구현전략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결론인 제6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장을 요약·종합함으로써 정보화시대 IT영역을 중심으로 펼쳐질 한국의 지식/네트워크 외교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제 2 장 IT시대 디지털외교의 부상

외교(外交, diplomacy)는 사용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쓰이는 국제정치학 개념 중의 하나이다.⁷⁾ 본 보고서는 외교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두 가지로 대별하여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외교는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전쟁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즉 외교는 국제적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정치 과정으로서의 외교는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여 왔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서 외교는 국가가 대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행위의 과정에서 채택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외교는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해왔다. 예를 들어 근대에 들어 부각된 외교의 개념은 상주외교사절에 의한 정보수집, 정보보고, 대표, 협상, 영사업무 등으로 특징지어졌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특징들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⁸⁾

최근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외교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디지털외교(digital diplomacy), 원거리외교(tele-diplomacy), 버추얼외교(virtual diplomacy), 사이버외교(cyber diplomacy), 네트워크외교(network diplomacy), 정보화시대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촉매외교(catalytic diplomacy), 탈근대외교(postmodern diplomacy) 등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외교의 개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 개념들은

7) James Der Derian, *On Diplomacy: A Genealogy of Western Estrangement*. (London and New York: Basil Blackwell, 1987)

8) 근대외교의 개념과 제도에 대한 개념적·역사적 고찰로는 다음을 참조. G. Harold Nicolson, *Diploma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Adam Watson, *Diplomacy: The Dialogue Between States*, (New York: New Press, 1983); M. S. Anderson, *The Rise of Modern Diplomacy 1450 ~ 1919*, (London and New York: Longman, 1993)

각기 다른 이론적 인식의 지평을 깔고 정보혁명과 외교의 중요한 단면들을 드러내 줌으로써 매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서구학계나 국내학계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보화시대 외교의 단편적인 특징에만 착안함으로써 다소 편협한 이론적 논의들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논의들은 RDA 연구의 일천한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개념적 재조정의 국면에 접어든 정보화시대의 외교를 21세기 세계정치 변화의 커다란 그림 안에서 입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정보화시대를 맞는 한국외교의 전략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외교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장은 현재 국제정치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정보화가 어떠한 맥락에서 외교의 형식과 내용에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자리매김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장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정보혁명론 일반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정보기술의 발달이 단순히 새로운 외교수단과 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심층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데 놓여 있다. 한편으로 정보화시대의 외교는 세계정치의 주요 권력자원의 소재와 그 작동방식의 변화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시대의 외교는 근대 국제정치를 지탱해온 국민국가체제의 양적·질적 변화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화시대의 외교개념은 전통적인 국제관계이론이 설정하고 있는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테두리를 넘어서 21세기 세계정치의 새로운 목표와 행위자의 등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장은 이러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 권력(power)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의 논의에 바탕을 두었다.⁹⁾

9) Jeffrey A. Hart and Sangbae Kim,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in Jose V. Cipurut, ed., *Of Fears and Foes: Security and Insecurity in an Evolving Global Political Economy*, (Westport, Conn.: Praeger, 2000); 김상배,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제 1 절 IT시대 외교과정의 변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외교과정에 있어서 정보가 중요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부쩍 정보의 중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외교과정에서 정보가 이전보다 훨씬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20여 년 전에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보는 외교과정에 있어 전에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혁명에서 비롯된다.

1. 정보기술과 정보혁명론

일차적으로 정보혁명은 반도체, 컴퓨터, 정보인프라, 통신기기, 방송장비 등의 ‘하드웨어’의 발달에 기원을 둔다. 최근 정보기술이 네트워크화되면서 나타나는 주요 경향은, 우선 그 기술적 초점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정보기술이 담는 콘텐츠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발전해온 정보기술의 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들이 수렴되는 현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융합(digital convergence)’이라고 불리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방송 등의 분야가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수렴되는 현상이다.¹⁰⁾ 한편, 이러한 디지털융합의 밑바탕에는 케이블이나 인터넷과 같은 유선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셀룰라나 인공위성 등과 같은 무선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통해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은 일대다(一對多) 대응의 미디어로부터 다대다(多對多) 대응의 쌍방향 미디어로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축이 이동하였고 이를 통해 전세계적인 차원의

모색』(서울: 오름, 2001);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 (2001)

10) David B. Yoffie, ed., *Compe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7)

상호접속성이 증대되었던 것이다.

국제정치학의 주요 관심사로서 정보화가 떠오른 것도 디지털융합의 맥락에서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의 컴퓨터의 활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설비들의 급속한 발달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이전의 군사무기나 산업생산시설과 관련된 기술과는 달리 정보를 생산, 수집, 분배, 소비, 저장하는 과정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군사혁명’과 ‘산업혁명’이 물리적 파괴력과 경제적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면, 정보기술의 발달이 야기하는 정보혁명의 성과는 두뇌사고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혁명적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사실 컴퓨터의 사용과 같은 정보기술의 도입이 인간의 지적 작업을 양적·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이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의 통신과 방송 및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다른 지평으로 비약시켰다. 이러한 정보혁명의 기술적 산물들이 최근 군사안보, 세계금융이나 무역,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넓게 채택되어 새로운 정보처리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자리잡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활용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다방면에서 획기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정보혁명의 와중에서 버추얼공간(virtual space)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이 창출되었다는 점이다. 사이버공간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에 의해 컴퓨터를 매개로 새롭게 생겨난 매트릭스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불리기 시작하였다.¹¹⁾ 일차적으로 사이버공간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인프라 및 이를 통해 연결되는 디지털정보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은 단순한 ‘기술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이버공간은 그 구성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영향을 강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현실공간의 사회적 재구성 과정에도 지

11) William Gibson, *Neuromancer*, (New York: Ace Books, 1984)

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사이버공간은 기존 현실공간을 보완하면서 꾸준히 그 외연과 내포를 확장시키고 있는 ‘사회공간’이다.

태생적으로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존재는 현실공간의 존재와는 달리 정보기술의 물적 인프라를 매개로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상상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상상이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될 수 있는 디지털정보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사이버공간은 디지털정보에 기반한 집단상상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노드(node)들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개별 노드들간의 접속은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은 ‘버추얼공동체(virtual communities)’로 발전될 여지를 갖는다.¹²⁾ 정보혁명이 국제정치학의 각별한 관심으로 끄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세계정치의 가능성에 있음은 물론이다.¹³⁾

2. 외교과정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달과 외교과정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되어 왔다. 정보와 데이터는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원재료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정보수집과 정책자문의 기능은 외교관의 중요한 책무로서 여겨져 왔다. 외교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공식·비공식의 출처를 통해서 수집된다. 공식적인 정보의 출처는 주재국의 미디어나 정부보고서들에 의존하며, 비공식적인 정보의 출처로는 주재국의 정치엘리트들이나 외교단(外

12) Howard Rheingold,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New York: HarperPerennial, 1994)

13) 하영선 편,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베스트 사이트 1000 해제』 (서울: 이슈투데이, 2001); 김상배, “사이버공간의 미래전략: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연구원 편, 『정보화와 한국: 쟁점과 미래전략』(서울: 한울, 2003), pp.170~218

交團)의 멤버들과 맺은 외교관 개인의 친분이나 비밀채널 등을 들 수 있다. 근대 외교정책에 있어 증대하는 외교적 의제들의 양과 질로 미루어 볼 때 외교당국이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의 범위와 깊이는 급격히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의 수집과 처리 및 보고의 과정에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는 정보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외교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되면 이에 걸맞은 형태로 외교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외교관의 업무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 사이에는 항상 일종의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¹⁴⁾ 예를 들어 1850년대에 전신과 해저케이블이 설치되면서 외교 훈령과 보고에 있어 거의 실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게 되고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외교관의 재량권이 상당부분 잠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전신과 해저케이블은 비용이 많이 들고 짧은 암호전문을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외교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위협했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보다 편리해진 장거리 항공여행, 직통전화의 개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글로벌 미디어의 발달 등이 이루어지면서 정보기술이 외교관의 역할과 위상에 미친 영향은 점차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해 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및 이동통신 등과 같이 정보혁명의 산물들도 고품질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외교과정의 재조정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보화에 따른 외교과정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외교업무 처리의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전산시설의 확충 및 외교정보 네트워크의 개설 등과 같은 ‘외교정보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외교정보화’는 외교부처 내부나 재외공관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구축하여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한다.

14) S. Eldon, *From Quill Pen to Satellite: Foreign Ministries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4); Wilson Dizard, Jr., *Digital Diplomacy: U.S. Foreign Policy in the Information Age*, (Westport, Conn.: Praeger, 2001)

아울러 외교부처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디지털화, 비자신청과 여권발급 업무의 전산화, 본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계 효율화 및 전자결재의 상용화, 재외국민 민원업무 통합관리체제의 구축 등이 외교업무 정보화의 주요 사업들이다. 이러한 외교정보화의 노력들은 외교전담부처의 내부조직을 넘어서 타 부처와의 업무공조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연동하는 지식공유의 플랫폼을 마련하여 외교업무 관련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을 지향한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경우 이는 외교정보기반의 공동활용을 통한 정부의 정보자원 처리능력이 극적으로 증대되는 외교부문 ‘전자정부(e-Government)’의 달성을 의미한다.¹⁵⁾

한편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 차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뉴스의 양과 질의 향상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처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기존에는 하루 단위로 배달되던 현지 신문과 잡지를 바탕으로 하여 각 재외공관이 수행하던 일간보고 형태의 관행을 무너뜨리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양의 동일한 정보들이 해외의 뉴스공급처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외교의 보고 기능은 다른 방식으로 형태를 바꾸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재국 내의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보고가 여전히 부가가치가 있는 재외공관의 업무로서 살아남는다면, 이는 아마도 기존과 같은 단순한 ‘정보전달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현지에 주재함으로 인해서 주재국 정부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해독하거나 또는 주재국의 문화를 체득해야만 포착할 수 있는 미묘한 뉘앙스를 판별해내는 ‘정보분석가’로서의 역할일 것이다.¹⁶⁾

인터넷은 정보수집의 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외교적 홍보의 통로로서도 활용된다. 자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로 제공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접속되는 곳이라면 어디의 누구에건 주요정책을 홍보하고 여론조사나 정책포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외교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¹⁷⁾ 한편 본부 및 재외공

15) 외교통상부, 『중장기 외교정보화촉진 기본계획(2002~2006)』 2001년 11월

16) Walter B. Wriston, “Bits, Bytes, and Diplomacy,”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1997); Jeffery R. Cooper, (2001)

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거주자 또는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체제를 구축하여 재외국민보호의 기능을 제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터넷이 강력한 외교적 홍보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타 글로벌 미디어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고 쌍방향적이며 비용이 싸게 먹힐 뿐만 아니라 내용의 풍부함에서 있어서 타의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에 의해서 창출되는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세계정치 또는 소위 사이버외교의 장으로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⁸⁾

이렇게 인터넷이 전통적인 외교의 영역으로 침투해 오는 맥락에서 소위 버추얼공관(virtual embassy) 또는 버추얼외교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¹⁹⁾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거론되었지만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던 해묵은 예측 중의 하나가 바로 상주외교공관의 소멸에 대한 논의이다. 예를 들어 장거리 항공여행과 텔레타이프 등과 같은 교통·통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상주공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었다. 그런데 인터넷과 외교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동일한 맥락에서이지만 훨씬 높은 강도를 가지고 상주공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상주공관은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외교창구 또는 정보원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정보 수집을 담당함으로써 원거리외교의 형태로 본국

17) Howard Cincotta, "Post-Modern Diplomacy and the New Media," i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 The Magazine on Information Impacts. The Center for In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July 2001).

http://www.cisp.org/imp/july_2001/07_01cincotta.htm

18) 하영선 편, (2001)

19)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1999); Sheryl Brown and Margarita S. Studemeister, "Virtual Diplomacy: Rethinking Foreign Policy Practice in the Information Age," *Information and Security*, 7, (2001)

정부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허브(hub)로서의 버추얼공관의 구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²⁰⁾

제 2 절 IT시대 외교영역의 변화

정보화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외교과정에 글로벌 미디어나 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도입되는 차원을 넘어서 전통적인 외교양식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맥락에서 찾아져야 한다.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정치의 권력이동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정보혁명의 도래는 외교영역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기술·정보·지식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외교의 영역이 기존의 안보와 통상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1. 정보기술과 권력론

국제정치학의 전통적인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국제정치의 장에서 국가는 행위의 지침으로서 물질적 차원에서 파악되어 측정 가능한 권력자원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이러한 물질적 권력(material power)은 주로 상대방 행위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된 권력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권력은 영토, 인구, 무기나 군대, GNP, 에너지 생산량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자원에 기반을 둔 능력에 의해 측정되고 평가되는데, 국제체제의 구조와 그 작동은 국제관계 행위자들 간의 이러한 물질적 권력의 상대적 분포에 의해 설명된다. 따라서 자원의 보유, 즉 ‘잠재적 권력’이 어떻게 상대방 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영향력, 즉 ‘실질적 권력’으로 변환되는지의 문제가 물질적 권력(또는 관계적 권력)

20) Gordon S. Smith, “Reinventing Diplomacy: A Virtual Necessity,” U.S. Institute of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 6, (February 2000)
<http://www.usip.org/vdi/vdr/gsmithISA99.html>

개념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²¹⁾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의 물질적 권력개념에 입각할 때 정보기술은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력자원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때 정보기술의 발달은 ‘권력이동(powershift)’ 즉 권력의 중심이 군사와 경제에서 지식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야기하며, 토지, 노동, 자본 등의 전통적인 생산요소에 비견되는 새로운 제4의 생산요소의 등장을 가능케 한다.²²⁾ 역사적으로 기술은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정보기술이 국제관계에서 지니는 권력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실감케 한 최근의 사례들로는 반도체 생산량, PC의 보급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수, 인터넷에 접속된 서버컴퓨터의 수, 개설된 웹사이트의 수 등의 지표가 국력을 재는 범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가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려는 데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1980년대 이래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정보기술의 개발과 인적자원의 양성을 통해 정보산업의 기반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소위 동아시아형 산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수행이 바로 이러한 물질적 권력의 개념에 기반을 둔 국가적 노력의 대표적인 예이다. 정보기술과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민간 또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기술·정보·지식 등을 중요한 물질적 권력자원으로 보는 발상에서 기인한다.²³⁾

이렇게 물질적 차원에서 파악된 정보기술의 권력적 성격이 현실 세계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은

21)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1948); Hart and Kim, (2000)

22) Alvin Toffler, *Power Shift*, (New York: Bantam Books, 1990); Drucker, (1993)

23) 김상배,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2002. 7), pp.111~130

물질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정치에서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의 중요성도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는 구조적 권력이란 행위자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이나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수잔 스트레인지(Susan Strange)에 의하면, “구조적 권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력, 즉 국가간, 개인간, 기업간의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틀을 구성하는 권력”이다.²⁴⁾ 구조적 권력에 대한 논의의 주요 관심사는 주어진 제도나 구조적 환경을 경유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미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과 더 나아가 그 제도와 구조적 환경을 변경하는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누가 기존의 제도와 구조 하에서 제약받고 있으며, 누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인데 정보기술이 구조적 권력의 의미를 갖는 것은 그 기술적 특성상 바로 이러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기술은 표준, 아이디어, 규범 등의 형성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정치의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표준화(standardization)나 표준경쟁(standards competition)의 문제는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뚜렷하게 부각된, 기술과 관련된 세계정치의 구조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정보기술이 갖는 구조적 권력으로서의 성격은 지적재산으로서의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내규범 또는 국제레짐에 대한 관심이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확산되는 맥락에서도 발견된다.²⁵⁾

한편 정보기술의 발달은 세계정치에서 구성적 권력(constitutive power)의 부상에도 밀접하게 관여한다. 구성적 권력은 상대방의 정체성, 이해관계, 가치체계 등의 구성 및 재구성에 작용하는 권력이다. 또한 구성적 권력은 설득이나 동의의 메커니즘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제도규범을 수용하도록 함으로서 원하는 행위를 얻어내도록 작동한다. 따라서 구성적 권력의 주요 관심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24) Susan Strange, *State and Markets*, (London: Pinter Publishers, 1988) p.25

25) 김상배, (2002)

상대방도 원하게 함으로써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에 있으며, 이러한 정체성과 이해관계 등의 재구성 과정이 다른 권력관계나 권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주로 탈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의 권력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크고, 조셉 나이(Joseph S. Nye, Jr.)의 ‘연성권력’의 개념도 이러한 맥락에서 있다.²⁶⁾

정보기술이 이러한 구성적 권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정보기술의 발달이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정보처리 과정, 즉 문화와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지식(symbolic knowledge)의 생산·분배·소비 과정에까지 연결된다는 면에서 발견된다.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미디어산업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대두되고 있는 정보서비스나 콘텐츠산업 등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문화는 궁극적으로 그 이용자의 가치나 관념의 체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적 권력의 원천이다.²⁷⁾

2. 외교영역의 변화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야기되는 권력의 소재와 작동방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보화시대 외교영역의 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군사와 경제 분야의 물질적 권력자원에 못지않게 기술·정보·지식 등의 비물질적 권력자원이 외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증대하고 있다. 사실 전통외교에서는 국가간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만이 ‘상위정치(high politics)’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영역으로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계환경에서 이러한 정치적·전략적 이슈들은 더 이상 국제관계와 외교의 지배적인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관심

26) Joseph S. Nye,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27) 김상배, (2001a)

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세계정치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혁명이 진전되면서 기존에는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협력 등의 문제가 국가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비국가 행위자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대외관계의 중요한 외교이슈로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술·정보·지식 자원을 둘러싼 양자간·다자간 외교의 경우를 보면 ▽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의 다자 외교 ▽ 각종 IT 관련기구에서의 기술표준과 지적재산권 및 정보문화 관련 외교 ▽ 갈릴레오 프로젝트의 착수를 위한 유럽 국가들의 IT외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현재 동아시아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술·정보·지식 자원을 둘러싼 양자간·다자간 외교의 경우를 보면, ▽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프로젝트나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Testbed 프로젝트와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협력외교 ▽ 정보산업 분야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중국·일본간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지역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협력외교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물질적 자원의 부상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정보기술 분야의 게임규칙과 구조 및 규범을 형성하는 새로운 외교영역의 등장과 밀접히 연관된다. 정보기술의 기술표준과 프로토콜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상되고 있거나 진행중인 글로벌 차원의 협력외교의 경우로는 ▽ IPv4, IPv6 등의 인터넷 관련 프로토콜 실현을 위한 협력외교 ▽ 무선 인터넷 사용을 위해 WIPI 등의 표준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차원의 협력외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보다 포괄적인 정보화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외교적 노력으로서 ▽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전자상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협력외교 ▽ 정보산업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 환경의 정비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양자간·다자간 외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기구의 장에서 정보통신 관련 국제협상이나 국제규범의 형성에 참여하

는 정보기술외교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ITU, OECD, WTO, ISO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 관련 규범이 확립되고 있다.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는 통신장비나 시스템의 조합표준을 육성하기 위한 제일의 세계적인 조직체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세계 차원의 규범을 확립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국외교와 연관 지워 생각해 보면 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내 정보통신 부문 워킹그룹인 APEC TEL에서의 활동이나 APEC 회원국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등과 같은 APEC에서의 정보기술외교 ▽ 아·태 전기통신협력체(APT, Asia Pacific Telecommunity)에서 전파 및 표준분야 회의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정보기술외교 ▽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주관하는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 등의 정책 및 국제규범의 제정에 참여하는 정보기술외교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통신서비스 협상의 참여를 통한 정보기술외교 ▽ 국제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에서의 국제표준 및 전파분야의 협상에 참여하는 정보기술외교 등을 들 수 있다.²⁸⁾ 최근 들어 특히 기술·지식과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충원하는 것이 외교부처 또는 실무부처의 국제 업무 담당부서의 시급한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²⁹⁾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협력이나 기술표준 및 국제규범 관련 협상의 문제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외교영역으로서 등장하는 것과 함께 정보화는 상징적 지식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되고 아이디어, 정체성, 가치 체계 등과 같은 비물질적 요소들이 세계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늘어나게

28) 정보통신부, 『e-Korea Vision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2002년 4월

29) Michael P. Ryan, *Knowledge Diplomacy: Global Competition and the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Washington, DC: Bookings Institution Press, 1998)

되면서 외교의 대상과 영역이 전통적인 의미의 여론주도층으로부터 보다 넓은 의미의 상대국의(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의) 국민 일반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국가안보를 담당했던 정부관계자의 범주를 넘어서 광범위한 비정부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국의 이해를 대변하고 홍보하며 설득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미국의 경우 공공외교는 ‘미국의 소리(The Voice of America)’와 같은 라디오방송 매체의 형태로 시작된 이래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외교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자리 잡았으며, 최근 들어서는 위성방송으로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지털 미디어들을 포괄하는 데까지 확대되었다.³⁰⁾ 전통외교에서는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되던 공공외교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보기술의 발달은 다른 아닌 인터넷의 보급과 활용이다. 앞서 언급한 사이버공간의 홍보외교는 정부 엘리트 간의 외교매체의 의미를 넘어서 대국민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이버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정보문화의 콘텐츠이다. 단순한 정책 홍보의 차원을 넘어서 역사적 문화유산이나 각종 문화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디지털화하여 소개하고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개설 등이 연성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화시대 공공외교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인식되고 있다.³¹⁾

이외에도 정보화시대 공공외교의 이슈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분야의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및 홍보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례로는 ▽ UNCTAD가 추진하는 국제정보격차 해소사업 ▽ 세계은행(World Bank)이 추진하는 정보격차해소재단(DGF,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 등과 연계한 국제정보격차 해소사업 ▽ UNESCO가 추진하는 국제커뮤니케이션 개발 계획(IPDC, International Programme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 세계정보통신개발총회(WTDC,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나 정

30) Wilson Jr. Dizard, (2001)

31) Joseph S. Nye Jr. and William Owens, “America's Information Edge,”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6)

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등과 같은 범세계적인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사회축정, 정보격차해소혁신, 지식공유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빈부계층 등의 주제별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일차적으로 이들 사업은 국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국의 본질적인 목적은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협력을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또한 선진국의 입장에서 ‘정보화’의 모델을 홍보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외교적 지위를 격상 시키려는 공공 외교적 차원과 개도국의 입장에서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촉진하려는 포석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제3 절 IT시대 외교주체의 변화

정보화는 외교과정과 외교영역의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이해되던 외교주체의 변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정보화와 외교주체 변화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근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이론을 근거로 하여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재조정되고 있는 국민국가의 역할과 위상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의 과정에 접어든 국민국가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1. 정보기술과 거버넌스이론

물질적 산물과 지식체계로서 이해되는 정보기술이 좁은 의미에서 파악된 그 개념적 핵심이라면 보다 넓은 의미의 이론적 시각에서 볼 때 정보기술의 개념은 그 개발과 활용의 과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문화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기술사회학이나 기술경제학의 전통에서 볼 때, 모든 기술체계는 그에 적합한 제도 환경을 기술체계 그 자체의 속성으로서 내재하고 있다.³²⁾ 다시 말해 물질적 산

물이자 지식체계로서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이전 및 확산은 기술 그 자체만의 독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기술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문화가 항상 개재되는 ‘사회적 과정’인 것이다.³²⁾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커뮤니케이션 관련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은 적합한 제도적 환경으로서 탈집중의 관리구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인터넷은 탈집중 관리구조를 요구하는 느슨한 결합도의 기술체계이다.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라는 말이 반영하듯이 인터넷은 그 초기의 형성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느슨하고 비대칭적이며 비집중적인 형태로 결합되면서 발전해 왔다. 또한 인터넷은 탈집중 관리구조를 요구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기술체계이다. 인터넷을 소위 ‘무질서의 네트워크(anarchic network)’라고 부르는 것도 패킷스위칭(packet-switching) 기술이 보여주는 비단선적인(non-linear) 상호작용의 복잡성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과 같은 탈집중의 기술체계를 관리하는데 있어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 전송을 통제한다든지 아니면 여과하려는 목적으로 집중 관리구조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여간해서 성공하기 어렵다.³⁴⁾

따라서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을 관리하는 제도 환경은 탈집중 구조의 형태를 띤다. 실제로 TCP/IP와 WWW 등의 인터넷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이버공간의 구성방식은 정보기술이 접맥되는 현실공간의 그것보다 더 복합적인 ‘다면적 제도체(multiperspectival institutional forms)’의 형태를 띠고 있다.³⁵⁾ 우선 영토적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는 선형적으로 부여되는 최상위 권위체가 없

32) Herbert Kitschelt, “Industrial Governance Structures, Innovation Strategies and the Case of Japan: Sectoral or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4), (1991)

33) 본 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술과 제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보기 위해서는 Kim and Hart(2001)를 참조.

34) 김상배, (2001b)

35) John Gerard Ruggie,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17, (1993)

는 것이 특징이다. 그 대신 사이버공간에는 개인과 집단이 연결되는 다양한 형태의 노드만이 존재하며, 이러한 노드들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수준의 버추얼공동체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사이버공간의 구성원리를 ‘신중세주의(neo-medievalism)’라는 개념을 원용하여 이해하기도 한다.³⁶⁾

국제정치학의 맥락에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세계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국민국가의 관계를 보더라도 정보화시대에는 국민국가라는 특정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엮여지는 집중의 제도 환경이 종전의 독점적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는 국민국가를 유일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간주해 온 전통적인 현실주의 국제관계이론의 기본전제를 침식하고 있다. 근대 이래 국민국가는 국경에 의해 구획된, 지리적으로 상호배타적인 영토주권을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최근 학계의 논의를 살펴보면, 국민국가 중심의 소위 웨스트팔리아 체제가 다양한 도전을 받으면서 상당 부분 재조정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데 의견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민국가의 국경은 초국가적 논리를 지닌 자본, 상품, 정보, 기술, 범죄, 질병, 공해 등의 흐름에 의해 침투되고 있으며, 국민국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영토주권적 권위를 침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⁷⁾

이러한 국가의 재조정 과정에서 정보기술은 국민국가의 관리능력과 주권적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이에 따른 세계질서의 심층적 변화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서 논의된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이 그러한 도전세력에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 그 자체가 국가의 능력과 권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 만들어낸 초국가적 환경인 사이버공간에서 세계정치의 행위들이 발생하면서 국민국가의 개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

36) Stephen J. Kobrin, “Back to the Future: Neomedievalism and the postmodern Digital World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 (1998)

37) Susan Strange,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정체성(nationality)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국민국가의 시민(citizen)들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면서 개별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네티즌(global netizen)으로서 행위한다.³⁸⁾ 이러한 와중에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등장은 세계정치의 영토성(territoriality)을 잠식한다. 인공위성이나 글로벌 미디어와 같은 기타 커뮤니케이션 기술들도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작동하는 정보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국민국가가 그어놓은 경계를 허무는 데 기여하였다. 요컨대 국민국가의 역할과 권위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더욱 약화되는 지경에 처해 있다고 할 것이다.³⁹⁾

이러한 환경 변화를 국내의 정치질서 전반의 재조정이라는 맥락에서 담아내기 위해 원용되는 대표적인 개념 중의 하나가 거버넌스이다. 최근 사회과학계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던 일반적인 ‘관리양식(mode of governing)’이라는 뜻의 보통명사로서의 거버넌스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일종의 고유명사적 현상으로서 기존의 집중 관리양식을 넘어서 탈집중 관리양식의 출현을 담아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래 제임스 로즈나우(James N. Rosenau) 등의 영미 국제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국가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아우르며 작동하는 새로운 세계정치의 탈집중 관리양식의 등장을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로즈나우가 말하는 소위 ‘다중심적 세계(the multi-centric world)’에서 국가로부터의 권위의 분산, 정치에 대한 경제의 우위확산, 비국가 행위자나 사회운동단체 또는 기타 초국가적 집단행동의 역할 증대 등의 현상이 국민국가의 정부로 하여금 정부간 또는 정부와 기타 비국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의 양식을 변경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은 국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국제정치의

38) Jessica T. Mathews, "Power Shift: The Age of Non-State Actors," *Foreign Affairs*, January/ February, (1997)

39) 김상배, (2001b)

작동방식이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형태로 탈집중되는 경향을 담아내려는 시도라고 할 것이다.⁴⁰⁾

2. 외교주체의 변화

이상의 정보기술과 거버넌스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정보화의 진전이 전통적인 외교조직의 위계질서와 집중형 통제구조에 도전하는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도입은 ‘위로부터의 통제’에 기반을 둔 집중 관리구조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케 한다. 탈집중적 정보통신 인프라와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도입되면서 조직내의 정보흐름을 위로부터 집중형의 통제를 통해 파악·관리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탈집중의 정보기술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위계적이고 공식화된 조직이 탈집중 관리구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⁴¹⁾ 마찬가지로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외교부처의 내부조직도 위계적인 피라미드형의 집중구조로부터 보다 수평적 네트워크형의 조직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직구성원의 의식이나 조직문화의 형태도 이러한 탈집중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혁신될 것이 예견된다.

국제정치학의 거버넌스 시각에서 볼 때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교부처 조직의 관리구조 자체가 탈집중화되는 것과 함께 정부조직 전체(또는 국가 전체)에 걸쳐서 외교의 주체가 다원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보화시대 외교주체 변화에 있어 중요한 축의 하나는 해당 국제업무의 전담부처들과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외교전담부처의 위상을 재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화시대 외교의 이슈는 직업외교관이 모두 감당하기에는 벽찰 정도로 전문화·세분화되고 있다.

40) James N. Rosenau,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1995)

41) 김상배, (2001b)

더군다나 해당 외교정책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들이나 기타 해당기관들의 숫자와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외교정책결정의 주요과정으로서 이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차후 정책수행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외교관들이 해당 국제업무와 관련된 창구로서의 독점력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시 말해 비전통적인 외교이슈들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직업외교관들은 정부내의 정보흐름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공식적 대표로서 유일한 목소리를 내는 존재일 수가 없게 된다. 실제로 재외공관에는 국방, 재정, 무역, 농업 등 분야의 정부부처로부터 파견된 주재관(attache)들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본국의 해당부처와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개설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카운터파트들과도 직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과 전산시설의 도입 등과 같은 외교정보화의 성과가 이러한 복합적인 외교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음은 물론이다.⁴²⁾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외교조직 또는 직업외교관의 역할과 위상은 재조정될 수밖에 없다. 전문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해당 전문가들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해당 부처 중심의 관심사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사안 자체에 대해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부처간의 공통점을 추려내는 식의 정보분석과 조정의 업무가 향후 외교전담부처의 기능에 부가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앞으로 요구되는 외교의 기능은 단순한 양자관계에서 해당 국가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국 정부의 정책과 구상을 대내외적으로 거시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종류의 종합적인 업무일 것이다. 요컨대 외교전담부처는 특정한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부처와 기관들의 다양한 시각들을 국가전체의 보편적 이해관계로 걸러내서 일관성을 부여하는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42) Wilson Dizard Jr., (2001)

외교주체 변화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은 국가영역의 테두리를 넘어서 시민사회영역의 사회단체, 기업, 학계 등의 전문가들을 엮어내는 조정의 역할과 관련된다. 특히 정보기술의 분야는 외교전담부처가 모두 떠맡기에는 벽찬 전문지식의 영역으로서 실제로 다양한 비정부기관의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결국 정보기술외교는 더 이상 국가영역에만 배타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정부부처,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느슨한 형태의 연합인 소위 ‘공공정책 네트워크(public policy networks)’ 또는 네트워크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⁴³⁾

이러한 네트워크외교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정보기술의 전세계적 확산이다. 다른 어느 정보기술보다도 인터넷의 활용이 민간전문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들은 기존에는 국가만이 독점하던 고급 기술정보들에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초국가적 차원의 청중들을 상대로 온라인상의 출판과 방송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였던 것이다.⁴⁴⁾

일차적으로 정보화시대의 외교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이 갖는 의미는 국가영역에서만 이루어지던 기존의 외교과정에 시민사회영역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통로가 개설되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비국가 행위자들을 통한 외교의 의미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비국가 행위자들이(때로는 국가영역을 우회해서) 자기들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시민운동단체들이 인터넷을

43) Wolfgang H. Reinecke, “The Other World Wide Web: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Foreign Policy*, 117, (1999/2000)

44) James N. Rosenau, “States, Sovereignty, and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U.S. Institute of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 5, (February), (2000); Tiffany Danitz and Warren P. Strobel, “Networking Dissent: Cyber Activists Use the Internet to Promote Democracy in Burma,” U.S. Institute of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 3, (February), (2000) http://www.usip.org/vdi/vdr/vburma/vburma_intro.html

통해서 데이터 수집의 독자적인 수단을 장악하게 되면서부터 특정 정책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에 대한 반대의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세계적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는 일들이 종종 관찰된다.⁴⁵⁾

사이버공간에서의 이러한 시민운동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정보자원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연성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며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공공외교의 개념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보화시대 공공외교의 부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새로운 외교영역의 출현이라는 관점과 함께 새로운 외교주체의 등장이라는 관점과 연결시켜 이해하여야 한다. 주로 해당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한 대외선전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주도에 의한 공공외교의 개념을 넘어서 정보공유와 정보투명성의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사회영역의 주체들이 모두 활발하게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공외교의 가능성이 정보화시대에 이르러 더욱 증대된 것이 사실이다.⁴⁶⁾

45) Steven Livingston, "Diplomacy and Remote Sensing Technology: Changing the Nature of Debate." i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 The Magazine on Information Impacts. The Center for In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July), (2001)
http://www.cisp.org/imp/july_2001/07_01livingston.htm

46) Brian Hocking, "Diplomacy: New Agendas and Changing Strategies." i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 The Magazine on Information Impacts. The Center for In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July), (2001)
http://www.cisp.org/imp/july_2001/07_01hocking.htm

제 3 장 외교과정의 변화와 지식외교의 모색

제 1 절 선진국의 지식외교 추세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외교 영역의 수단과 목표는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문서를 이용한 정보의 저장방식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으며 e-mail, 인터넷 망 등의 커뮤니케이션 수단도 발전하면서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즉 정보화시대에 발전하는 기술적 측면과 맞물리면서 영역 확장의 측면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외교과정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정보화시대의 화두로서 ‘지식’은 외교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교 수단/목표의 변화, 외교과정의 변화에 이어서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외교 영역에서도 정보화를 통한 지식 기반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외교과정의 변화 현황을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지식외교 추세

먼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미국 국무부는 기존의 외교 분야를 주로 담당해 왔다. 대사관, 영사관 등 전 세계에 230개가 넘는 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들어 이러한 외교영역의 변화와 함께 외교의 정보화를 통한 지식기반외교의 선두에서 있다. 국무부는 2000년 1월에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ic Plan’을 필두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외교 분야 전반에 대한 정보화작업을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5년 동안 구축된 인프라를 통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0년의 계획은 국제관계와 외교 분야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1990년대의 IT분야 발전을 이용한 국무부의 신속한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계획은 외국에 소재하는 모든 미국 정부 소속 기관들에게 소위 “e-Diplomacy”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IT 인프라를 통해 미래의 업무 방식을 바꾸게 되고 결국 미국 정부의 문화를 바꾸게 될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국무부의 IT환경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구축된 네트워크 환경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외교정책과 국내정책 모두에 부합할 수 있는 팀 기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에 상관없이 상호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을 이용하게 되며 정보의 빠른 이동과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업무과정은 자동화, 표준화되어 많은 기능을 사용자들이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바일 등의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에도 적용되어 사용자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2005년까지 완료될 국무부 주도의 IT 환경 구축 계획은 크게 세계적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e-Diplomacy 시스템 구축, 기존 케이블 시스템의 대체, 통합 중앙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교관들의 업무 정보화, 사적 네트워크와 연계 등의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계를 총괄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에는 네트워크나 플랫폼, 서버 등의 고효율, 고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기반으로 고도의 능력을 갖춘 세계적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비밀 정보와 공개 정보가 분리되어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보안을 중시하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통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Diplomacy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의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공공 부문, 공공 외교를 확립하고 웹 사이트를 기반으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조약, 난민 등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본국과 각 국의 공관을 연결하고 있는 케이블 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안을 유지 할 수 있는 단독적인 e-mail 시스템을 구현

하고 SMART 프로그램을 통해 각 정부기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돕고 있다. 이러한 SMART 프로그램은 통합된 중앙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는데, 한 기관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막고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외교관의 업무는 기존의 방식에서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방식으로 운용되며 본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되어 저장된 정보 자원을 이용하여 업무에 연관된 각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기반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문서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위한 사적 네트워크와의 연계는 IT 환경의 운용을 위한 인력의 확충과 효과적인 업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2006년부터 시작될 국무부의 정보화 계획은 2000년에 계획되어 2001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에 이어 이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전의 계획이 국무부의 IT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확립하고 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무부의 국제 관계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보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외교 분야의 힘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⁴⁷⁾

2006년부터 시작될 새로운 계획은 외교를 위한 지식 리더십, 움직이는 외교관, 협력을 통한 외교, 효율성과 보안, 변화 유도의 다섯 가지의 키워드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올바른 정보를 통해 정보의 우위를 점유하고 의사결정과정을 확립하는 데에 주력한다.⁴⁸⁾ 그리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컴퓨터 환경을 구현하여 국무부의 지식, 정보자원을 이용하는 외교관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⁴⁹⁾ 또한 국내외를 통틀어 다른 정부 기관, NGO, 민간 기업, 공공 간의 협력과

47) U.S. Department of State, *IT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06 ~ 2010 Goals Paper*, (2004)

48) U.S. Department of State, (2004) p.7.

49) U.S. Department of State, (2004) p.10.

연계를 증진하고⁵⁰⁾ 외교 분야의 필요성과 보안의 위험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⁵¹⁾ 마지막으로 IT 전문가들이 외교 업무를 보조하고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 외교의 지식적 측면은 국무부의 주도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CIA나 국방성 등의 다른 기관들도 이러한 지식외교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주된 외교 업무를 국무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기타 기관에서도 이러한 외교 업무 전반을 보조하거나 때로는 관장하기도 한다. 특히 CIA나 국방성의 경우에 안보와 관련된 외교 업무나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함으로서 국무부의 외교업무와는 다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기타 선진국의 지식외교 추세

일본은 IT혁명이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뒤지지 않으면서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01년 1월부터 ‘e-Japan’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부문의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2000년 11월 27일 발표된 ‘IT 기본전략’과 11월 29일에 제정 공포된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형성기본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 정부 전 부문을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개혁하려는 “일본 신생을 위한 신개발정책(new development policy for the rebirth of japan)”이라는 이름을 가진 계획은 기본전략으로 IT분야의 상대적인 낙후를 극복하고 최첨단의 IT 환경을 일본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일본이 지식 기반형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일본 국민이 지리적, 신체적, 경제적 제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지식,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자유로우면서 규율이 있는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위한 개혁이 되도록 하며, 세

50) U.S. Department of State, (2004) p.13.

51) U.S. Department of State, (2004) p.16.

계의 재능이 있는 인재를 끌어들이 지식기반형 사회를 범세계적으로 실현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지식기반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정부는 첫째,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와 경쟁정책, 둘째, 전자상거래 규칙과 새로운 환경의 정비, 셋째, 전자정부 실현, 넷째, IT관련 인재양성의 강화의 네 가지 정책 분야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⁵²⁾ 우선 IT 혁명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 기업, 국가간의 거리, 시간을 극복하고 대량의 정보유통을 가능하게 하도록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1년 이내에 유,무선의 다양한 인터넷망에 의해 모든 국민이 매우 저렴하게 인터넷에 상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주소 공간을 확보하고 국내 인터넷 망의 초고속화와 병행하여 국제적인 인터넷 접속의 초고속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시장의 규칙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요구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실현하는 움직임 상에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어떠한 규칙을 제정하고 이용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틀을 구축해야 하며, 일본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정합성을 가진 룰을 정하는 움직임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전자정부는 지금까지 행정부 또는 정부와 국민간에 서류,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업무를 온라인화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범부처 및 중앙, 지방간에 정보를 리얼타임으로 공유, 활용하는 새로운 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문서를 전자화하여 종이로 된 서류를 없애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활용을 위한 업무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문서를 서류문서와 동등하

52) 남장근·사공목, “e-Japan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서울: 산업연구원, 2001)

게 취급하고 전 국민의 IT화를 촉진하도록 한다. 전자 정부의 실현은 외교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는데 주로 일본 총무성을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 정부적인 계획이라 하겠다.⁵³⁾

마지막으로 IT관련 인재양성의 강화는 일본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향상하며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 전체가 IT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 창의력이나 논리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방안을 확충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초, 중, 고, 대학의 IT 교육체제를 강화하고 사회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려 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도 지식외교에 경주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정보화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 1998년에 ‘Electronic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Citizen’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은 IT기술이 어떻게 정부에 적용되어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보다 국민과 기업에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내외 레벨에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⁵⁴⁾ 더불어 1999년 3월에는 실제적인 수행계획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외교부문을 포함한 전 내각의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계획은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공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변혁하며, 고품질, 고효율성을 부여한다는 세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다섯가지의 세부 실행 계획으로는 a) 장기적인 정책 결정의 절차 확충, b) 사용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c) 공공 서비스의 질, d)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정부의 혁신, e) 공공서비스의 가치 부여를 제시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에 슈뢰더 총리에 의해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들을 인터넷에 적합하

53) IT Strategic Headquarters, “e-Japan Priority Policy Program-2004,” June 15, (2004), pp. 4~8.

54) 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Electronic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Citizen,” February, (1998)

도록 2005년까지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01년 11월을 시작으로 1년에 한번씩 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음해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⁵⁵⁾ 자세하게 살펴보면, 2005년까지 총 451개의 업무들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도록 계획하고 있고 2004년 2월까지 262개의 서비스들이 시작되었다. 이 중에 외교 업무는 총 4개로 2002년에 2개, 2003년에 1개, 2004년에 1개로 온라인화가 완료된 상태이다.⁵⁶⁾ 2004년까지 연방 온라인 시스템의 유용성을 높이고 연방행정부의 온라인 서비스의 구조를 확립하며 행정부와 주(州)간 연계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8년 1월에 계획(Government Action Programme for the Information Society)를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보화 작업에 착수했다. 2000년에는 소위 “One-stop” 서비스로서 ‘Service-Public.fr’이 온라인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었다. 2005년까지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에는 외교 분야에 대한 정보화 작업과 함께 부처 간 연계 시스템의 확립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북구의 국가들도 지식외교를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정보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북구의 국가들은 이러한 이점을 지식외교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가인 핀란드와 덴마크를 살펴보면, 우선 핀란드는 2001년부터 정보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으며 개의 주된 사업들 중에 정부의 정보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보화 사업 중에는 외교 분야의 정보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용자들의 편익에 맞춘 비자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⁵⁷⁾ 덴마크는 2006년까지 정보화 계획을 모두 마칠 준비를 하고 있다.

55) http://www.bund.de/nn_6484/Content/Service/English/BundOnline-2005-Model-Projects/Implementation-plan/Implementation-plan-knoten.html_nnn=true

56) Otto Schily, “BundOnline,” p.10

http://www.bund.de/nn_6472/Content/Service/English/BundOnline-2005-Model-Projects/Implementation-plan/Implementation-plan-for-the-BundOnline-eGover-seite-2-anl,templated=raw.property=publicationFile.pdf

덴마크의 정보화 계획 중에 외교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는 모든 정부 부문의 업무, 커뮤니케이션의 디지털화, eGovernment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Joint 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을 적용하고 2003년에 37퍼센트에 머무르고 있던 전자 서류의 사용은 적어도 2006년까지 80퍼센트 이상으로 올리고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도 디지털 형태로 60퍼센트 이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다.⁵⁸⁾

제 2 절 IT인프라와 외교정보의 디지털화

현재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교정보화 사업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지식외교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외교정보화 사업은 1996년부터 추진되어 현재 제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04년에는 제4단계의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된 바 있다.⁵⁹⁾ 전자정부 11대 사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정보화사업 전체에 비교해 볼 때 외교정보화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2002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수준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아서 43개 부처 중 중간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의 외교정보화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11월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새로이 수립하고 사업의 전열을 정비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교정보화는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지식외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도 멀다.

1. IT인프라의 구축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된 외교정보화 사업 분야는 크게 e-Diplomacy 구현사

57) Information Society and Management's Strategic Ability in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Society Programme," (2001) pp.6~7

58) http://e.gov.dk/english/project_egovernment/egovernment_strategy/signposts/index.html

59) 외교통상부, 『2004년도 외교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안)』 (2003년 5월)

업, 광역외교망 구축사업, 외교정보통신 정보화사업, 여권 정보화사업 등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e-Diplomacy 구현사업은 2004년부터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다. <표 3-1>에 나타난 외교정보화 사업의 투자규모를 보면, 2001년 104억에서 2002년 약 110억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89억으로 감소하였으나(e-Diplomacy 사업예산은 미확보), 2004년도의 예산 계획은 약 244억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 외교정보화 예산현황(2001~2004)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계획)
e-Diplomacy 구현사업	0	0	미확보	11,639
광역외교망 구축사업	5,953	7,083	7,045	9,753
외교정보통신 정보화사업	1,838	1,892	1,880	1,906
여권 정보화사업	2,633	2,003	0	1,081
계	10,424	10,978	8,925	24,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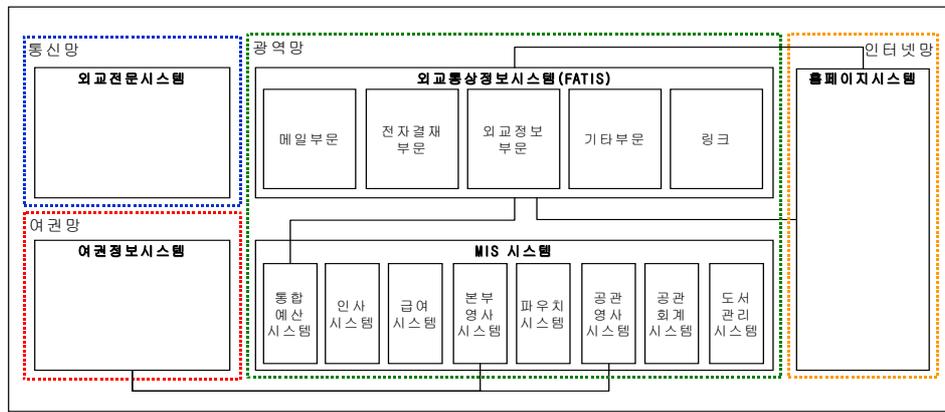
출처: 한국전산원, 『외교정보화 사업 평가자료』 (2003. 9.)

외교통상부의 정보시스템 현황을 보면, a) 외교통상업무 관련 시스템, b) 외교행정업무 관련 시스템(MIS시스템), c) 외교전문 관련 시스템, d) 대국민서비스업무 관련 및 기타 시스템 등의 넷으로 대별되며, 업무를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총 17개 정보시스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의 네트워크는 광역외교망, 외교정보통신망(전문망), 여권망 등의 3개 망을 독자망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⁶⁰⁾ 그런데

60) 광역외교망은 해외공관의 외교업무 지원을 위한 내부 네트워크로서 외교통상 정보시스템(FATIS), MIS,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는 전용회선이며 외교전화도 지원한다. 외교정보통신망(전문망)은 전 세계 각 공관과의 외교전문용 송·수신하기 위한 네트워크로서 전용회선, Infonet/Dial-up 회선 및 위성통신망 등을 활용하고 가용성과 보안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는 망이다. 여권망은 여권발급 업무를 위한 네트워크로서 정부의 초고속망과 연계되어 타 공관과의 접속을 제공하며 각 회선과 장비는 이중화 구조를 가진다. 외교통상부, 『2004년도 외교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안)』

이러한 외교통상부 네트워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광역외교망과 외교정보통신망(전문망) 및 여권망 등에서 운용되는 모든 시스템들이 상호연계되지 않고 따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구비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시스템들이 각기 필요한 업무특성에 따라 혼용되어 있고, 일반 사용자가 통합검색을 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그림 3-1) 참조).

[그림 3-1] 외교정보시스템의 연계관리구조



출처: 한국전산원, 『외교정보화 사업 평가자료』 (2003. 9.)

또한 주재국의 IT인프라 수준에 따라 망 구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2003년 현재 135개 재외공관 중에서 광역외교망은 71개 공관에만 보급되어 있으며, 기타 64개 공관과는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교통상부는 광역외교망의 보급을 계속 확대·고도화시켜 나아갈 예정이지만, 135개 재외공관 모두를 연결하는 구상이라기 보다는 허브(hub) 공관과 노드(node) 공관 및 오프라인 공관 등의 기능 분담을 전제로 망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교업무의 기존관행이나 보안 등의 이유로 이미 보급된 FATIS의 활용도도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한편, 외교통상부 차원의 시스템 통합관리를 넘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과 외교통상부 네트워크의 통합관리문제가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2년 10월에 개통된 전자정부 11대 사업 중에서 외교정보화에 관련된 부문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외교통상부가 진행하고 있는 광역외교망 사업은 외교통상부의 개별 부처차원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며, 국가적 차원의 행정정보화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정보통신 시스템 자체도 통합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식/네트워크 외교 관련 정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조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밖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로는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의 문제가 있다. 현재 전문망은 기술적으로 보안이 되지만 광역외교망 및 여권망은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안장비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안수행의 관리 인력과 전문지식도 현격하게 부족한 형편이어서 외교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을 갖추어 놓고도 보안상의 이유로 인해 특정한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전자결재는 엄두도 못내고 여전히 서류결재를 실시하고 있다.

2. 외교정보의 디지털화

현재 외교통상부가 진행하고 있는 외교정보화의 문제점은 IT인프라의 구축 수준을 넘어서 외교정보의 디지털화에서도 발견된다.⁶¹⁾ 외교통상부만큼 하루 단위로 쌓이는 정보가 많은 부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일 재외공관으로부터 타전되어 오는 외교전문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정책문서, 외교사료 등과 같은 외교관련 기록 및 외교정보의 디지털화와 공개도 미흡하며, 해외 현지정보,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나마 디지털화된 외교정보도 시스템 간에 통합관리되고 있지 못한 점도 큰 문제이다. 요컨대, 현재 외교통상부는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네트워크에 담을 디지털화된 외교정보나 이러한 디지털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여태까지 별로 체계적인 작업을

61) 한국전산원, 『외교정보화 사업 평가자료』 (2003년 9월)

벌여오지 못했다.⁶²⁾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외교통상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센터로서의 ‘외교정보센터’의 구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교정보센터는 방대한 외교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하에 주요 정책문서, 연구업적, 해외자료 등의 체계적 DB화나 재외공관에 분산된 외교통상정보의 중앙집중화 및 업무처리의 단일창구구축 등의 사업을 추구한다. 2004년의 외교정보화 계획에 포함된 ‘자료관 시스템’의 구축도 외교정보센터의 범주에 속하는데, 자료관 시스템의 도입으로 공문서의 체계적 보관 및 보존체계 구축, 전자문서 시스템의 공문서 관리 및 정부기록물 보존소와의 연동을 통한 기록물 자동화 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지향하고 있다.⁶³⁾

그런데 이러한 외교정보센터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외교정보와 외교사료의 구분과 정리 및 보관이라는 정보자원의 관리에 너무 치중하고 있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현재 구상되고 있는 외교정보센터가 본격적인 사이버외교의 본산이 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수요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는 외교정보의 디지털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DB화나 외교통상부 조직 내에서만 활용되는 외교정보의 디지털화 작업이 아니라 실제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외교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된 외교정보들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일방적인 방식을 넘어서는, 외교대중을 고려하는 수요 친화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부나 재외공관의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의 다국어화 작업을 통해서 디지털 외교정보들의 글로벌 지향성도 증대시켜야 한다.⁶⁴⁾

62) 외교통상부 외교관과의 인터뷰

63) 외교통상부, 『2004년도 외교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안)』

64) Howard Cincotta, “Post-Modern Diplomacy and the New Media.” i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 The Magazine on Information Impacts. The Center for In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July 2001).

제 3 절 한국 지식외교의 모색

지식외교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함에 있어서 IT인프라의 구축이나 외교정보의 디지털화 등의 작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교경쟁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디지털화된 외교정보를 이용하여 생산된 외교지식을 실제 외교과정에서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외교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집적관리한다는 것은 외교과정에서 활용할 외교지식을 생산하는 조건이 혁명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디지털정보의 존재가 자동적으로 외교지식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식외교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구축된 외교정보 관리시스템이 외교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도록 ‘외교양식’이 바뀌어야 한다. 결국 지식외교는 정보를 집적하고 지식을 가공하는 양식이 IT의 도입에 의해서 양적·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외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IT환경에서 외교정보를 생산하고 외교지식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한국의 지식외교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현재 입수가 가능한 자료와 현직 외교관들과의 인터뷰 등에 근거해서 볼 때, 한국외교가 정보를 집적하고 지식을 가공하는 외교양식을 도입하는 속도는 매우 느린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외교정보센터에 대한 구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외교에 있어서 디지털 외교정보의 집적과 관리에 대한 발상은 있을지언정 이러한 발상이 진정한 지식외교로 연결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이하에서는 지식외교의 핵심적 개념으로 파악되는 다섯 가지 측면에 비추어서 한국외교의 현주소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외교에 있어서 디지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정보활용율이 그리 높지 않다.⁶⁵⁾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외교분야에서도 인터넷상의 방대한 디지털정보를

http://www.cisp.org/imp/july_2001/07_01cincotta.htm

65) 2002년도 외교정보화 평가위원과의 인터뷰

양적·질적으로 처리하여 필요한 외교지식으로 걸러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외교통상부는 세계주요 외교사이트에 떠 있는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분석하며 이를 외교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웹 브라우저에 저장된 북마크(bookmark)는 몇 개나 되는가?” “그러한 북마크는 어떠한 체계적인 디렉토리의 구조를 가지고 짜여있는가?”라는 비유적인 질문에 대해서 현직 외교관들의 답변은 변변치 못하다. 요컨대, 현재 한국외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원론적인 ‘인터넷외교’의 발상은 있을지언정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제공되는 외교지식을 정책결정과정에 활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이버외교’적인 발상은 없다.

둘째, 현재의 외교정보화의 과정에서는 실무 외교관들의 암묵지(tacit knowledge)를 디지털화하고 활용하려는 지식외교에 대한 구체적인 발상이 미흡하다. 순환보직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 외교관의 직무체제하에서 외교협상이나 주재국의 외교환경 등에 대한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인수인계하는 것은 중요한 외교정보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암묵지의 기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공감하면서도 정작 기록을 남기는 작업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외교통상부에서도 조직 내 지식관리체계와 기록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조직구성원들의 수많은 암묵지가 서로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현지상황에 대한 암묵지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⁶⁶⁾ 외교정보의 디지털화 작업은 이러한 암묵지의 코드화(codification)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화된 정보와 암묵지로부터 걸러진 외교지식들을 한 단계 더 가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직접 외교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교지식을 제공하는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의 발상이 부족하다. 현재까지의 외교통상부 상황을 보면, 정책연구

66) 외교통상부 외교관과의 인터뷰

와 정책개발의 기능이 주로 아날로그정보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다시 말해 외교통상부의 조직이나 관련기관 및 특정 전문가 풀의 공식·비공식 채널에 의존하여 수집된 산발적 정보들에 의거하여 정책에 대한 구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로 대변되는 정보화시대의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들의 디지털화 및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디지털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특정 그룹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의 절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각계의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 그룹과 국제무대에서의 실무지식을 갖춘 외교관 그룹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외교지식을 공유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디지털 공공외교’의 실천이 미흡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외교는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나 활용만으로 끝나지 않고 외교상대에 대해서 보편적 설득력을 가진 외교지식을 가지고 침투해 갈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이렇게 실질적인 ‘연성권력’을 행사하는 사이버외교의 성공여부는 고급 디지털 콘텐츠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외교의 현실을 보면,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도 외교적 설득논리의 개발이 미약함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각종 현안 문제들과 관련하여 현재 외교통상부의 웹사이트로 한국외교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의 청중을 불러들여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외교콘텐츠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연구와 정책개발의 과정에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설득논리의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콘텐츠에서 승부가 걸리는 지식외교는 궁극적으로 ‘문화외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정치경제적 발전의 경험 그리고 미래 발전상을 아우르는 국가적 비전을 개발·홍보해 나가는 인터넷 문화외교의 준비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웹사이트나 다른 채널을 통해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진 한국의 이미지를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과 함께 건설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정립해 나가는 작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외교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주요 사이트에 대한 링크 제공 또는 검색기능을 첨가하

는 형태로 외교통상부의 웹사이트가 포털사이트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의미가 클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정부 내의 다른 실무부처와 유기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외교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외교정보센터’⁶⁷⁾의 구상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67)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한다면 ‘외교정보센터’라는 용어보다는 ‘외교지식센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4 장 외교영역의 변화와 IT외교의 모색

정보화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IT분야는 한 국가만이 모든 것을 책임 질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IT분야 자체의 성격이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각국이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IT분야는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정보화시대에 들면서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이러한 IT분야를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환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각국은 세계시장에서 IT분야의 참여한 경쟁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를 이익으로 환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IT분야도 정보화시대에 외교영역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제 1 절 선진국의 IT외교 추세

1. 미국의 IT외교 추세

미국의 경우에 IT 과년 부처들의 IT분야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IT분야의 경제적인 가치는 기존의 산업분야와 비교해서 크기 때문에 미국은 IT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상무성은 IT분야의 등장에 대해서 ‘Emerging Digital Economy’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응 방안을 밝히고 있다.

새롭게 펼쳐지는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에 대한 기본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 발전시키며, 발전을 저해하는 광범위한 규제나 검열이나 부당한 세금 부과를 하는 등의 부정적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원거리 통신이나 방송사업의 분야의 적절한 경쟁을 유도하여

전세계 통신 네트워크망의 확대를 조기에 달성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디지털 경제 시대의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T분야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디지털 시대에 초래되는 고급 노동자의 대이동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⁶⁸⁾

미국은 인터넷에서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확대와 국제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전자상거래를 NII(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주요 응용분야로 선정하여 수요창출 및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1993년 10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연방조달효율화(Streamlining Procurement through Electronic Commerce)’를 발표하여 1997년 1월부터 연방조달업무에 전자상거래의 도입을 의무화하였고, 1994년부터 16개 지역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ECRC)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7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은 ‘A Frame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미국주도의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5개의 기본원칙과 9개분야로 구분하여 미국의 추진전략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인터넷 상거래의 무관세화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도출, 국제적 통일규범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1997년 12월 미국과 EU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에 대한 무관세 및 추가적 관세의 신설금지에 동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무관세 대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나 소프트웨어, 영화, 음반 등 인터넷을 통해 배달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이 실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관세부과의 차별 원칙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상거래 정책은 12개 부처로 구성된 FECAT(Federal Electronic Commerce Acquisition Team), 표준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상무성산하 국가표준기술원(NIST), 국방부 및 국세청 등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68)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Emerging Economy*, (1998)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FBI, 각 주의 사법 당국과 공조대책을 강구하면서 기존의 연방거래위원회법, 텔레마케팅규칙 등의 소비자보호법령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이슈에 대해서 새로운 법의 제정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IT분야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IT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의 문제가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와 ANSI가 주로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NIST는 기술혁신, 무역, 보안 등의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규율하는 기관으로 국내 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민관 합동의 IT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국 IT분야의 세계 시장에서의 잠재력을 높이고 있다.

2. 기타 선진국의 IT외교 추세

일본은 2003년 7월에 ‘신 IT 기본안: e-Japan 전략II’가 결정되었고 8월에는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달성시기를 제시한 ‘e-Japan 중점계획-2003’이 발표되었다. 이는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IT를 활용하여 경제사회시스템에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하겠다. 지속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IT의 활용증대는 경제재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IT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향상과 사회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도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구조개혁의 완성을 바라다보고 있다. 이는 기존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의해서 이익이 증가하고 비용에 대한 효과가 최대화되는 구조 조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IT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정보의 이용을 원활히 하고 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제2기 ‘e-Japan 전략II’의 단계에서는 기업이나 정부중심의 공급자의 논리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인 개개인의 관점이 중시되고 있다. 동시에 IT를 통한 국제적 협력도 중요시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시아에 위치한 일본이 21세기의 바람직한 국제관계

를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 각 국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IT에 관련된 각 분야별 포괄적인 협조체제를 아시아 각 국가의 국제협력체제에 의해 향후 아시아 지역이 세계 속에서 발전된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경우, EU의 지식·정보화 사회 정책은 EU 단일시장 강화 및 EU 경제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ICT 산업발전에 기반한 지식기반경제 (knowledge-based economy)로의 필수적이라는 인식과 미국에 비해 유럽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산업과 인터넷 상용화가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위기감에서 1990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EU 회원국을 단일 시장으로 더욱 융합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 보급확대와 범유럽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회원국 국경간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산업 정보화를 통해 전반적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ICT 산업발전을 통해 EU 경제의 성장 동력과 고용확대를 도모하고 인터넷 보급을 통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회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93년 집행위는 “성장, 경쟁력, 고용(Growth, Competitiveness and Employment)” 보고서를 발간하고 EU의 경제 성장, 경쟁력 증진, 일자리 창출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보통신 발전이 핵심적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로의 전환 필요성 등 EU의 전반적인 지식·정보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⁶⁹⁾

EU 집행위는 1994년 5월 범유럽 지식·정보기반 산업구조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유럽과 범세계적 정보사회(Europe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일명 Bangemann 보고서)’를 발표하고, 6월 정보화사회 이행을 위한 최초의 EU 행동 계획인 “Europe’s Way to the Information Society” 보고서를 발표하여 통신서비스의 완전한 자유화, IT 연구프로그램 강화, 범유럽네트워크 형성 등을 구체 이행 목표로 제시하

69) 자세한 내용은 eEurope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ww.eu.int/information_society/eeurope/2005/index_en.htm

였다. 집행위는 1996년 행동계획을 개정하고, '96년, '97년, 그리고 '99년에 정보화사회정책 관련 녹색(Green paper)를 발간하여 정보통신 분야 정책을 보다 구체화한다.

1990년 후반에 들어 EU는 경제, 교육, 보건, 사회적 요소를 망라한 종합적인 정보통신 정책을 구상하게 된다. 1999년 12월 발표된 'e-Europe -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보고서는 EU의 포괄적인 지식·정보화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시민과 가정, 학교, 직장, 행정관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공공서비스, 보건, 유통 분야의 인터넷 활용 강화 방안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 3월 리스본 EU 정상회의는 이 보고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2010년까지 EU를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경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리스본전략'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 제시를 위해 EU 집행위는 2000년 5월 "e-Europe 2002 Action Plan"을 발표하여 인터넷보급, 교육, 공공 서비스, 보건 분야에서 2002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하였고, 이 계획은 2002년 세비아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e-Europe 2005 Action Plan"으로 계승되어 시행되고 있다. EU의 정보통신 정책은 범 EU 차원의 정보화사회 건설을 목표로 'e-Europe' 정책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U의 정보화사회 정책을 대략 나누어 보면 크게 5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80년대 중반이후 계속 추진되어 오고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 자유화로서 독과점형태의 기존 통신시장을 신규사업자의 진출입이 자유로운 보다 경쟁적인 시장형태로 바꾸기 위한 시행방안이다. 둘째는 정보화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활용 강화정책으로서 광대역통신망(broadband)의 보급 확대, 보건, 정부, 전자상거래 등 사회 저 분야의 인터넷 활용 강화 정책이다. 셋째는 정보화사회의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보안, 스팸메일 방지, 인터넷보안 등 정보통신 보안 강화하는 분야이며, 넷째는 3세대 이동통신 등 새로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각국간 기술표준화, 상호호환성을 강화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며, 다섯째는 정보통신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과 관련된 분야이다.⁷⁰⁾

제 2 절 글로벌 IT질서 형성에의 참여

1. 기존의 IT 관련 국제기구 활동

기존의 국제기구 중에서 IT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는 정보화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IT분야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국제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에서는 통신분야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정하고 전파 분야의 각 국의 주파수를 할당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술들이 기존에는 몇몇의 선진국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지만,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각 국의 기술이 발달하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정보기술에 대한 각 국의 외교의 장으로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겠다. 현재 ITU는 세계 186개국의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ITU는 전파통신기술 관련 개발 섹터(ITU-R), 전기통신 표준을 담당하는 섹터(ITU-T), 개발도상국의 통신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섹터(ITU-D)로 나뉘어 있다. 대표적으로 ITU-T를 살펴보면, ITU-T는 기술, 기술의 사용, 무역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술 표준에 대해서는 13개의 스터디 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2,700개 이상의 표준을 정하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도록 하고 있다. ITU는 현재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1차 회의는 2003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렸고, 2차회의는 2005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세계정보통신개발총회(WTDC,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도 개최하고 있는데, 1994년에 아르헨티나, 1998년 말타를 거쳐 2002년 터키에서 3차례에 걸쳐 개최된 이 회의는 IT기술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야기된 정보격차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⁷⁰⁾

7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Europe 2005: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COM(2002) 263 final, (2002)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기존의 국제기구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이다. WTO에서 IT 관련 외교 협상은 무역, 관세에 관련한 모든 IT 산업이 포함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협상을 살펴보면 통신서비스 협상을 들 수 있다. 통신서비스협상은 1997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최종적으로 69개국이 양허각서를 제출하여 1997년 2월 15일에 합의가 성립되어 본격화되었다. 양허각서를 제출한 국가는 공통적으로 서비스의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따라서 시장접근의 확보와 내국민대우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협상은 일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슈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양허각서에 대한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에 회의를 통해 다시 정하게 된다.

한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주관하는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 등의 정책 및 국제규범의 제정에 참여하는 정보기술외교도 빼놓을 수 없다. 전자상거래 및 정보보호에 관한 OECD의 관심은 OECD가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성장, 국제무역의 증진, 사회환경의 증진이라는 목적에 맞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정보보호에 관해서는 2002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5일간 열린 OECD 정보보호작업반(WPISP,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및 정보통신위원회(ICCP,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licy) 회의에서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회원국 대표간 폭넓은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OECD 정보보호작업반은 정보사회 및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이를테면 전자서명인증 및 유전자정보보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암호 및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선진국들 간의 의견 조정과 방향 설정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유전학적 테스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토의와 프라이버시보호기술(PETs), 1997년 암호 가이드라인 및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검토작업과 각 국의 정보보호 정책현

71) 자세한 내용은 WTDC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itu.int/ITU-D/conferences/wtdc/2002/brochure/who_what_where_why.html

황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

2. 새로운 IT 관련 국제기구 활동

IT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영역과 기술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국제기구만으로는 모두 아우를 수 없는 현실에 다다르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IT 관련 국제기구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 안에서도 외교적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국제기구는 ICANN⁷²⁾이다. ICANN은 인터넷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즉 도메인, 프로토콜 등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에서 1998년에 만들어진 기구이다. 인터넷 도메인 네임, IP 주소, 프로토콜, 포트 주소에 관해 주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가장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2년 10월에 시작된 ASCII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프로토콜 문제에 대해서 2003년 6월에 ICANN이 도메인 네임의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4년 6월에 말레이시아 콰라룸푸르에서 ICANN 정기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는 ASCII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워크샵과 함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워크샵도 열렸다.⁷³⁾

또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⁷⁴⁾

72) 1997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이 인터넷 주소 관리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상무부 산하 NTIA는 1998년 1월 인터넷 주소관리기능을 민영화하기 위한 인터넷 관리체계에 대한 녹서를 발표하여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에는 그간 NSI와 독점계약을 맺어 관리를 위임해 온 인터넷 주소를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10월에는 인터넷 주소 할당과 관리 권한을 ICANN에 전임할 것이라고 밝혀 인터넷 주소의 민간이양계획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국전산원, “1998년도 세계 정보화 추진현황과 추세,” 『정보화동향분석』, 5권 22호, (1998)

73) 자세한 내용은 ICANN의 홈페이지 <http://www.icann.org/meetings/kualalumpur/>를 참조

74) 2001년 6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는 UN회원국 정상들이 한

도 또 하나의 새로운 국제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정보격차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진 각국은 국제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각종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과 2005년 2번에 걸쳐 세계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2003년에 열린 회의에서는 175개국의 50명의 정상과 11,000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했으며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 분야, 국제기구의 역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여, 전세계의 IT 기술 향상, IT기술의 신뢰성과 정보보호, 세계적 환경 구축,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문화적 차이 인정, 미디어, 정보사회윤리, 국제적 지역적 협력의 11가지 원칙을 선언하였다.⁷⁵⁾

한편, 세계은행(WB, World Bank)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해소재단(DGF, Development Gateway Foundation)도 IT분야와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 재단은 전 세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교육 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한국의 KISDI, 인도의 NCST), 매년마다 기술발전에 대한 포럼을 열고 이슈를 공유하면서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국가에 발전에 대한 경험과

자리에 모여서 글로벌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비하는 국제협력의 방안을 논의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를 2003년에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로 개최할 것이며, 2005년에는 튀니지에서 제2차 WSIS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WSIS의 과정을 통해 향후 21세기 정보화 분야의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WSIS의 배경과 의제 및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로는, 서보현(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03.2)를 참조; ITU에서 주관하는 WSIS의 공식 홈페이지 <http://www.itu.int/wsis>를 참조하는 것도 유용하다. 국내의 WSIS 관련 웹사이트로는 정보통신부의 후원 하에 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http://www.wsiskorea.org>와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http://www.wsis.or.kr> 등이 있다.

75)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Executive Secretariat, “Report of the Geneva Phase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Document WSIS-03/GENEVA/9(Rev.1)-E, February 18, (2004), pp.4~10. (http://www.itu.int/dms_pub/itu-s/md/03/wsis/doc/S03-WSIS-DOC-0009!R1!PDF-E.pdf)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들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⁷⁶⁾

마지막으로 세계표준화협력회의(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를 들 수 있다. 이 회의는 국가간 표준화가 아닌 범세계적 표준화를 위해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 단위의 단체나 표준화 기구들이 모여서 능률적인 표준화 방안을 토의하고 협력하는 회의이다. 참여 표준기구로는 미국의 T1, 유럽의 ETSI, 일본의 TTC, 캐나다의 TSACC, 호주의 ATSC, 한국의 TTC 등이 있으며 참관 단체로는 ITU-T, ISO/IEC JTC1, ISOC, TIA, ARIB 등이 있다. 지금까지 9번의 전체 회의가 있었으며 10번째 회의는 프랑스에서 2005년 8월에 열리기로 계획되어 있다.

제 3 절 동아시아와 남북한 IT협력

1. 동아시아 IT협력의 현황과 전략

동아시아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술·정보·지식 자원을 둘러싼 양자간·다자간 외교로는 우선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프로젝트가 있다. TEIN은 한국에서 제안된 프로젝트로서 2000년 3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EU, 아시아-EU를 연결하는 ‘유럽·아시아 초고속 정보통신망(트랜스 유라시아네트워크)’의 구축에 합의한 것이 시초이다. TEIN은 이후 ASEM 실무회의에서 신규사업으로 공식 제안되었으며, 2000년 10월 ASEM 정상회의에서 신규 ASEM 사업으로 승인된다.⁷⁷⁾ 2001년 12월 5일에 ‘TEIN I’이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개통되었고 이후 TEIN의 발전을 위해서 TEIN 전문가 그룹 회의

76) 자세한 내용은 세계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NEWS/0,,contentMDK:20040929~menuPK:34480~pagePK:36694~piPK:116742~theSitePK:4607,00.html>

77) 나향렬,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워크(TEIN)의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4권 11호,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pp.28~29

가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서울과 브뤼셀에서 열렸다. 이후 2004년에 말레이시아 팔라렘푸르에서 ‘TEIN II’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네트워크 리서치와 IPv6, 가상현실, e-Government, e-Commerce 등의 워크숍이 열렸다.⁷⁸⁾ 더불어 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APII(Asia 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Testbed 프로젝트와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협력외교가 벌어지고 있다. APII는 1994년에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최초로 제안한 것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의 국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APEC회원국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이후 APAN(Asia Pacific Advanced Network)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어 1년에 2회 정기적인 회의가 열리고 있다.⁷⁹⁾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의 IT분야 지역협력은 2000년 11월에 열린 ASEAN+3 정상회의가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한중일 IT 국장급 전문가회의, IT장관회의의 정례화, 7개분야 협력약정의 체결을 거쳐서 2004년 7월에 상설협의체화에 합의하였다. 7개 분야로는 3G, 4G이동통신, IPv6 등의 차세대 인터넷, 디지털 TV와 방송, 통신망 안전과 정보보호, 공개 소프트웨어, 통신 서비스 정책, 2008년 북경 올림픽이 약정되었다. 이러한 협력 약정에 따라서 2004년 3월과 4월에 걸쳐 실무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었고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선정하여 2004년 7월 일본 홋카이도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IT장관회의의 의제로 상정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이전의 협력활동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동아시아 정보통신 정상회의’로 회의를 격상시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동아시아 정보통신 정상회의의 원활한 실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국 기능을 하게 될 국제협력협의체(Internat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3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력은 2000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e-비즈니스포럼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또한 3국간 경제협의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IT, 금융, 에너지, 서비스 업종 등을 비즈니스 포럼에 포함하고 한중일 유력 기업인들과 한국의

78) 자세한 내용은 TEIN 홈페이지 <http://www.transeurasia.org>를 참조할 것

79) 자세한 내용은 APAN 홈페이지 <http://www.apan.net>을 참조할 것

전경련, 일본의 경단련,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2차 한중일 비즈니스포럼이 열리기도 하였다. 한국의 e-트레이드 허브와 일본의 e-마켓이 연동되어 ‘한일 e-트레이드 허브’사업이 진행되고 있다.⁸⁰⁾ 이 사업은 2003년 7월에 한,중,일간 사업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한국 중심의 동북아 공급망 관리 허브 구축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한중일은 4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구상으로 한중일 표준 협력체와 아·태지역 통신 협력체(APT, Asia Pacific Community)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4세대 이동통신의 경우, 우선 한국과 일본이 지역을 대표하는 표준을 만들고 이를 확대시켜 ITU 등에 전파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경우에는 한중일 3국간 문화콘텐츠 산업협력 도모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2003년 9월에 채택하고 매년 정부차원의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정부 관계자 및 산업계 대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자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⁸¹⁾

한편 동아시아 IT협력의 사례와 관련하여 최근 특별한 주목을 끄는 것은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Linux) 분야에서의 한중일 삼국의 협력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은 가장 열성적으로 리눅스를 지원하는 사례이다.⁸²⁾ 중국은 각종 법·제도를 통해 정부 구매과정에서부터 리눅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중국 정부는 리눅스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에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

80) 『전자신문』, 2003년 9월 25일

81) 『전자신문』, 2003년 9월 20일

82) 중국 정부가 리눅스 지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쏟는 이유로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소스코드의 통제가 초래할 잠재적인 국가안보에의 위협, 중국 사회의 내부통제 과정에서 공개 소프트웨어가 주는 편이성, 낮은 진입비용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리눅스, 그리고 윈텔제국으로 표상되는 미국 자본주의로부터의 의존탈피의 의도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홍기소프트웨어가 개발한 중국형 리눅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정부기관들이 이러한 중국형 리눅스의 구입과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100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1,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리눅스 개발 사업에 투입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리눅스 및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까지 인프라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2003년부터 19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 인프라를 리눅스로 교체하는 작업에 1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2004년에는 표준컴퓨팅 환경 개발에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도 2003년 초부터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그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임베디드 리눅스 솔루션 개발을 위해 3년간 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표준컴퓨팅 환경개발에도 15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 약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⁸³⁾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근 2004년에 들어 기존에는 각국별로 진행되어온 리눅스에 대한 지원정책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되는 최근의 사례는 2004년 4월 3일 중국의 베이징, 7월 27일 일본의 삿포로, 12월 2일의 한국의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중·일 공개 소프트웨어 포럼’이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관계부처 국장급을 대표로 하여 벌이고 있는 협의체인데 동아시아를 세계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기술개발테스트, 인력양성, 표준화연구 등의 3개 분야에 집중하여 지역협력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동아시아에서 리눅스와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는 담론과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나서서 지역차원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⁸⁴⁾

83) 『전자신문』, 2004년 3월 8일

84) 『전자신문』, 2004년 11월 29일

2. 남북한 IT협력의 현황과 전략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남북한간의 교류는 정부간의 필요에 의해서만 직접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 교류는 대부분 간접 연결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도 통일백서에 의하면 직접연결은 1971년부터 2003년까지 총 33개의 회선이 남북한간 직접연결되어 있으며 간접연결망은 모두 일본을 거치는 31개의 회선이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인 간접 연결망으로는 경수로사업용으로 16회선이 3차에 걸쳐서 연결되었고 금강산 관광지원용으로 10회선이 3차에 걸쳐서 연결되었다.

소프트웨어는 주로 남북 공동개발과 북한 소프트웨어의 수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바세나르 협약으로 인해 남한의 소프트웨어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에서 북한과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은 주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2000년 3월부터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와 용역 수행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북경에서 소프트웨어 공동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2004년 5월까지 약 286만 달러를 투자하여 44건의 개발과제를 진행하였고 이후에 5개의 개발과제를 추가하면서 총 311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리고 엔트랙은 2001년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광명성총회사와 정보기술제품 공동개발을 위해서 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평양시에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4년까지 1차 공사를 마쳤으며 일부의 입주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다. 2차공사와 입주는 2005년 9월까지 완료할 것이다. 하드웨어는 1998년 이후로 주로 위탁가공과 임가공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하나로통신 등이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 같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의 경우도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서 한정된 품목, 한정된 공정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표준화 분야는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차원의 학술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었다. 주로 컴퓨터 처리, 자판, 용어 등의 기초적인 분야에서 시작되고 있다. 1994년부터는 남북 컴퓨터 전문가가 참석하는 ‘우리말처리 국제학술대회’를 북경에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남한의 정

보통신용어사전과 ITU-T/R용어 정의집을 간접적으로 북측에 전달하였다. 영진닷컴은 2003년 8월 방북하여 북한의 인민대학습당과 기술서적 번역, 출판사업 협력 및 도서교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부터는 매년 1만권씩 8년에 걸쳐 통 8만권의 컴퓨터 관련 도서를 기증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후의 남한의 남북 IT 협력을 위한 계획으로는 크게 남북한 공동 IT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동통신 및 국제관문국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우선 남북 공동 IT협력위원회는 남북간 정보통신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전체의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와 향후 통일비용의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동통신 및 국제관문국 사업은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한반도 통신 인프라를 표준화하고 민족 동질성 확보 차원에서 이동통신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통신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남북 통신협력사업을 통해 통일이후 남북간 이동통신 단일표준을 확보하고 북한지역 통신망 고도화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제 5 장 외교주체의 변화와 네트워크외교의 모색

제 1 절 선진국의 네트워크외교 추세

1. 미국의 네트워크외교 추세

IT시대 미국의 네트워크 외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보정책을 구성하고 정보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국내정치세력간의 상호작용, 즉 네트워크를 고려한 외교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무성의 일상업무에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비밀을 중시하는 경향과 외교분야를 공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에 순조롭지 못했다.⁸⁵⁾ 그러나 정부 부처간, 정부와 민간 사이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외교는 정보화시대에 들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무성을 비롯한 미국의 연방 정부 각 부처들은 이러한 네트워크외교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국무성에서는 Bureau of Public Affairs 산하에 ‘Office of Public Liaison’을 두고 있다. 이 부서에서는 미국 내 국민과 행정부의 의사소통창구 역할과 함께 행정부의 정책을 공공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된 프로그램은 워싱턴 프로그램, 공공 커뮤니케이션, 지역 프로그램, NGO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⁶⁾ 우선 워싱턴 프로그램은 국무부가 소재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회의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외교적 이슈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포럼들은 미국의 정책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9·11 이후에 미국의 정책에 대해 많은 자문을 이러한 워싱턴 프로그램을

85) Wilson P. Dizard Jr., (2001) pp.165~192

86) 미국 국무성 산하 Office of Public Liaison 홈페이지에서 발췌.
<http://www.state.gov/r/pa/pil/>

통해서 얻고 있으며 워싱턴의 정책을 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리는 역할이 되고 있다.

공공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은 일반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받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전화를 포함하여 e-mail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직접 담당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국무성은 워싱턴 프로그램 이외의 지역적인 프로그램도 전개하고 있다. ‘타운 미팅(Town Meeting)’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지역을 돌아가면서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회의는 전일 또는 반일로 이루어지게 되고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며 국장급의 간부가 같이 참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회의의 결과는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때로는 녹음, 촬영되어 다른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02년 11월에 Public Liaison Office는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 컨퍼런스에는 중 플로리다 대학의 국제정치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이 참석했으며 워싱턴의 외교 정책 간부들과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폭 넓은 토론을 하였다.⁸⁷⁾ 컨퍼런스는 비디오 컨퍼런스의 형식을 빌어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고 한다.⁸⁸⁾ 또한 같은 달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는데, ‘Quiz Show, It’s Academic’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분야에 대해 퀴즈를 통해 참가한 학생들이 풀어나가는 퀴즈쇼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동시에 미국 외교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어 장차 미국 외교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하는 장으로 이용한다.⁸⁹⁾

87) Office of Public Liaison, US Department of State,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Students Hear Terrorism Presentation: Timely Discussion, Lively Questions and Answers” <http://www.state.gov/r/pa/pil/16704.htm>

88) 2002년 11월에 열린 컨퍼런스 중 질문, 답변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국무성 산하 Office of Public Liaison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ww.state.gov/r/pa/pil/16705.htm>

89) Office of Public Liaison, US Department of State, “State Department Hosts It’s Academic Quiz Show: ‘Face Off’ on Foreign Affairs”

NGO 연계 프로그램은 여러 목적을 가지고 넓게 분포되어 있는 NGO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이용된다. NGO는 행정부의 담당 직원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매 달마다 워싱턴 지역의 NGO를 위해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NGO를 위한 외교정책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NGO들과 함께 회의를 디지털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외의 NGO에게도 참가의 기회는 주어지지만 대부분이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는 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4, 2005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미국의 목적과 미국인들’, ‘이라크에서의 활동’, ‘정치 참여에 여성의 역할’, ‘해양 정책’, ‘대테러전을 위한 세계적 캠페인’, ‘비자 문제’, ‘이라크 권력 이양’ 등이 열렸으며 각 정책의 담당자 또는 수장이 참석하고 있다. 2005년 1월에는 ‘이라크 선거’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라크 선거 방식과 권력 이양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졌다.⁹⁰⁾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이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Hometown Diplomats Program’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프로그램은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과 일반 국민들의 연계를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자원자들은 정부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⁹¹⁾

이렇게 미국은 공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어떠한 한 정책, 한 부서에만 국한되어 NGO, 공공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공 네트워크 또는 NGO와 정부 사이에 정책 입안, 수행 등이 원활히 되

<http://www.state.gov/r/pa/pil/16088.htm>

90) Office of Public Liaison, US Department of Stat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Liaison Unit (NGO Unit) 2004 Topics” <http://www.state.gov/r/pa/pil/28576.htm>; Office of Public Liaison, US Department of Stat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Liaison Unit (NGO Unit) 2005 Topics” <http://www.state.gov/r/pa/pil/40400.htm>

91) 몇몇의 ‘Hometown diplomat’들은 국무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ometown diplomats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ww.state.gov/r/pa/pil/c6865.htm>

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기타 선진국의 네트워크외교 추세

일본은 “e-Japan” 전략의 일환으로 외교분야에서도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네트워크 외교를 확립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외무성에서는 부처내 LAN 도입, 1인당 하나의 컴퓨터 지급 등의 정보화가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 업무의 시스템은 의사결정의 신속화, 사무처리의 간소화 등의 행정의 정보화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2000년 5월 19일 외무성의 전자화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정보화를 통한 외교분야의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행정 사무의 전자화를 근거로 하여 연락, 통지 및 정보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에 대해 전자화를 꾀함과 동시에 협의, 조정 및 신청, 승인과 관련한 사무에 대해서도 가능한 전자화를 꾀하는 것으로 업무 전반에 전자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⁹²⁾ 계획의 실현을 위해 우선 정보 통신 기반의 재정비와 내부 사무처리 순서의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이는 외무 행정의 정보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으로 PC 등 정보 기기, 외무성과 재외 공관의 LAN 등의 네트워크 정비, 확충을 통해 일체적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타부처와도 연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무처리의 방법과 순서를 재검토 하고 필요에 따라서 문서 관리 규정 등의 내부규칙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외공관내의 LAN을 확장, 정비하여 외무성과의 고속, 고기능 연결을 추진하여 멀티미디어 대응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외무성 WAN’의 정비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고기능, 고효율을 통해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면서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 각종 IT 기

92) 日本外務省, “外務省のペーパーレス化(電子化) 実施計畫,” 平成12年5月19日 (2000)<http://www.mofa.go.jp/mofaj/annai/shocho/denshika/jissikei.htm>

술을 통해 업무의 간소화,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1999년 말부터 운영된 부처간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에 맞추어 업무 처리 방법의 간소화를 꾀하고 있으며 2000년에 도입된 종합 문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전자문서의 공유화를 꾀하는 동시에 전 정부의 전자화를 추진하는데에 동참하고 있다.⁹³⁾

더불어 일본은 2002년 7월에 외무 행정 수속에 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다. 이 계획은 “e-Japan 중점 계획-2002”를 근거로 하여 외무성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과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외무성 내의 온라인화를 위한 기반 정비와 외무성에서 관장하는 개별 업무의 온라인화 실시 계획의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⁹⁴⁾ 우선 외무성 내의 온라인화를 위한 기반 정비를 위한 계획을 살펴보면, 2002년까지 인증, 접수 등의 시스템과 인터넷 온라인 접속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외무 업무 수속 등의 전자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비하며 2003년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확충하고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 업무 순으로 살펴보면, 2001년에 일본인이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시 공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2002년부터 여권 법령을 검토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수속에 관해서 부분적, 단계적 온라인화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증명절차도 간소화해 2002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도 늘려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선 여권과 관련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는데 2001~2년에 걸쳐서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 및 신청, 신고 등 수속에 관한 범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일반 여권 신청 등의 온라인화를 꾀하였으며 2003년에는 업무 처리 과정을 검토하여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온라인화를 수행

93) 자세한 내용은 “外務省のペーパーレス化（電子化）実施計画”에 수록되어 있는 별첨 자료를 참조할 것.

<http://www.mofa.go.jp/mofaj/annai/shocho/denshika/beppy01.pdf>

94) 日本外務省, “外務省 行政手續等の電子化推進に關する アクション・プラン,” 平成14年7月30日 (2002a)

http://www.mofa.go.jp/mofaj/annai/shocho/denshika/action_p.html

하고 있다.⁹⁵⁾

유럽의 경우, IT 기술을 통한 외교 조직의 개혁은 개인, 지역,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계를 새롭게 만들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마련되고 있다.⁹⁶⁾ 이러한 계획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의 그림처럼 각 부처 내부의 업무간 유기성을 극대화 시키면서 공공, 기업 등과의 연계하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⁹⁷⁾과 함께 정부 내부의 각 부처간의 연결, NGO 등의 비 정부 행위자들과의 연합 형성⁹⁸⁾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04년 10월에 eEurope 자문위원회 산하 전자정부 소그룹은 2005년 이후 전자정부의 전략을 제시한 보고서를 낸 바 있다.⁹⁹⁾ 이 보고서에는 5개분야의 29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이 전자정부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리스본 전략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 전자정부의 초점은 파급효과에서 업무의 변환을 가져와야 하며 유연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공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유럽의 상호운용성 체계를 확립하고 각국의 정보화사업간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부의 변환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다. 공공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응답과 함께 체제의 간소화, 품질과 효율성의 추구로서 이러한 변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95)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府省内オンライン化基盤整備計書,” 平成14年7月30日 (2002b)

http://www.mofa.go.jp/mofaj/annai/shocho/denshika/pdfs/action_p1.pdf를 참조할 것.

96) Jeremy Millard, “ePublic services in Europe: past, present and future,” August, (2003) pp.1~6, <http://europa.eu.int/idabc/en/document/3577/5671>

97) Jeremy Millard, (2003) pp.8~9

98) Jeremy Millard, (2003) pp.10~11

99) CoBra, “eGovernment beyond 2005: Recommendations for modern and innovative public administration by 2010” IP/04/1167, (2004)

이러기 위해서는 최상위 수준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기존의 EU 정책을 이러한 변환 작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이후 10년을 “보다 나은 정부를 위한 도구로서의 eGovernment”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정치, 사회, 경제, 기술의 발전 경향에 맞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은 보다 지식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분산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¹⁰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공공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보다 나은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IT기술을 전략적인 도구로서 이용하고 이러한 공공의 가치는 정부의 거버넌스 역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¹⁰¹⁾ 둘째, 지식 기반의 eGovernment를 통해 지식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만든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포함된 거버넌스에서 파생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발전된 구조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²⁾ 셋째, 새로운 정부는 개개인이 가지는 수요에 맞추어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는 서비스를 준비, 실행, 접근 가능성을 모두 가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¹⁰³⁾ 넷째, 하나의 집중된 정부 조직을 벗어나 분산된 eGovernment 구조를 만든다. 이는 NGO나 개인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IT 기술을 도입하고 보다 강력하고 혁신적이며 장기적인 협력 모델과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할 중요성에 기인한다.¹⁰⁴⁾ 민간 부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분산된 업무처리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공, 민간, 사회 행위자들의 증가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EU, 개별 국가, 지역 레벨에서의 협력체제 구축은 정부 내의 구조

100) European Commission, “eGovernment in the EU in the next decade: the vision and key challenges,” August, (2004) p.11

101) European Commission, (2004) pp.11~12

102) European Commission, (2004) pp.12~13

103) European Commission, (2004) pp.14~16

104) European Commission, (2004) pp.16~17; OECD, “The eGovernment imperative: main findings” Policy Brief, March, (2003) http://www.oecd.org/publications/Pol_brief

개혁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¹⁰⁵⁾ 다시 말해서, 하나의 부서가 하나의 업무를 각각 관장하는 이전의 구조와 달리 공공과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Front Office”와 여기에서 취합된 업무를 통합하여 “Back Office”에서 유기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¹⁰⁶⁾ 이는 정부를 계서적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변혁하는 동시에 공공의 가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제 2 절 네트워크외교의 대내적 측면

1. 조직개혁과 업무정비

우선, 정보화 분야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개혁과 업무정비라는 차원에서 볼 때, 외교통상부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2003년 현재 정보화 조직 현황을 보면, 본부에는 정보화 담당관실 9명, 외교통신 담당관실 20명, 외교통신 제2담당관실 20명 등을 비롯하여 총 49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외교정보 관리직이 상주하는 재외공관 수는 총 81개인데, 총 101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¹⁰⁷⁾ 공식적으로는 외교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 인력은 앞서 언급한 지식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IT인프라의 기술적인 관리나 외교정보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기능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외교관들에게 이들 업무들은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2003년도 현재 외교통상부 내에서 공공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도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대민관계의 업무는 공보관실, 정보화담당관실, 홍

105) European Commission, (2004) pp.17~18

106) “Front Office-Back Offic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eremy Millard, (2003) p.9의 그림을 참조할 것.

107) 한국전산원, 『외교정보화 사업 평가자료』

보과 정보상황실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화외교는 문화외교국 내의 문화협력과 등이 관여하고 있어 정보화시대 공공외교의 추진을 위한 외교통상부 내의 업무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¹⁰⁸⁾

최근 북한핵 문제나 WTO 시장개방협상 등과 같은 현안에 외교통상부의 주 관심사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미래외교의 중심축이 될 지식외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할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점이 현재 외교통상부 조직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은 IT외교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군축원자력과에서 ITU의 정보통신, 위성 관련 사항을 담당하였던 데에서 잘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WSIS에의 참여 문제는 WSIS가 ITU의 관할이라는 이유로 한때 군축원자력과에서 담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외교를 위한 독자적 담당조직을 굳이 새로이 만들지는 않더라도 태스크포스(task force) 형식의 지식외교 담당 조직의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정보화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가 안고 있는 더욱 고질적인 문제는 정보화와 관련된 조직문화에서 발견된다. 그나마 외교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외교통상부만 잘하면 되지”하는 식의 부처중심주의가 잔존하여, 외교통상부의 차원을 넘어서 외교정보화를 전자정부 전체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발상이 부족하다. 또한 조직원들의 정보화마인드라는 차원에서 외교통상부는 정부 내의 타 부처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 외교통상부 직원내에서도 세대 간 정보격차가 존재하여 중견 간부층과 소장층의 정보화에 대한 이해의 격차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⁹⁾

2. 정부 부처 간 공조체제 구축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외교와 관련된 타 부처와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만

108) 외교통상부의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를 참조.

109) 2002년도 외교정보화 평가위원과의 인터뷰

무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외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외교전담부처로서의 외교통상부와 IT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자원부와 문화관광부 및 과학기술부 등의 실무자들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들 부처들 간에는 정보화 관련 국제업무에 대한 연계체제의 구축이 미흡하며, 실무 부처들의 국제협력관실에서 업무를 주도하고 외교통상부의 담당자가 최종 단계에 국제회의에나 배석하는 정도이다. WSIS에의 준비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보여주었던 무관심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전문지식의 영역은 실무부처가 담당하더라도 소위 ‘지식조정자’로서의 외교통상부의 역할은 부처간의 업무조정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대한 국가전략적 판단이라는 차원에서 소홀히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해당 부처의 ‘특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사안 자체에 대해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국가전체의 ‘보편 이해관계’로 걸러내서 정보분석과 조정업무를 행하는 외교전담부처의 역할과 위상의 정립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만약에 외교통상부가 이러한 지식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힘든 여건이라면 중장기적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지식외교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을 외교통상부 외부에 마련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 CKO(chief knowledge officer)’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실제로 현 단계에서 한국 지식외교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3의 외교영역’으로서의 기술·정보·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디지털 외교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CKO의 구상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조직현황을 보면, 현재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총괄 사령탑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 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은 주로 현안인 안보외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며, 가장 관련된 업무를 취급할 듯한 과학기술보좌관은 주로 기술과 산업 및 교육 등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어 이 글에서 제기한 의제를 다루기에는 적당하지가 않다. 그렇다고 이러한 제안이 또 다른 상설조직의 설치안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태스크포스 조직인 버추얼기구(virtual agency)로서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버추얼기구에는 정부 관료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나 민간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활약하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도 ‘디지털 외교관’으로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¹¹⁰⁾ 전문적 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사안의 발생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인적정보의 관리 및 공유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적자원의 전문분야별 체계적 활용을 극대화하는 태세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 풀의 구성 또는 민간재원의 발굴과 육성도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의 현실은 새로운 전문인력의 양성문제는 고사하고라도 현재 산재해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활용하려는 의식조차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네트워크외교 추진체계의 수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시민사회가 IT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독자적인 ‘사회지식’의 창출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한 것에 비해서 진정한 네트워크외교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지식’들은 ‘국가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사회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지식’의 형태로 엮여져야만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외교지식화될 수 있다. 실제로 범지구적 가치실현 및 초국가적 연대가 필요한 분야에 있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정부간 기구나 조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정보화 분야 시민단체들은 정부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교담당부처가 정부차원의 지식조정자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 차원에서 지식/네트워크 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110) Sheryl J. Brown and Margarita S. Studemeister. “Virtual Diplomacy: Rethinking Foreign Policy Practice in the Information Age,” *Information and Security*, 7. (2001);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1999).

제 3 절 네트워크외교의 대외적 측면

1. 최근 대외구상의 문제점

국내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작업과 함께 대외적인 차원에서도 네트워크외교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지식외교 분야에서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규범의 형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글로벌 규범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징검다리 전략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는 전략도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이러한 대외적인 네트워크 외교전략이 그 구상 단계에서부터 맥을 잘못 짚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네트워크외교의 대외적 측면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바로 최근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정외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비전, 그 중에서도 특히 ‘IT 허브국가론’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IT허브국가론을 중심으로 한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네트워크외교의 대외적 전략의 단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¹¹¹⁾

IT허브국가론은 세계최고의 IT인프라 구축, 고부가 지식정보사업 육성, 고부가 IT R&D 및 산업의 육성, IT 집적단지 조성 및 지원, 디지털 콘텐츠 생산·유통 기반 구축, IT 교류협력의 강화 등을 통해서 세계, 특히 동북아 IT분야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정책구상이다. 2002년 7월 재정경제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형태로 등장한 이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그 구상이 다듬어져 오고 있다. 21세기 세계질서의 변화와 증대하는 IT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IT허브국가론이 제기하고 있는 의제들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그 자체가 미래 국가전략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11) IT허브국가론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검토와 비판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동북아 IT허브 건설전략: 비판적 검토,” 제1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포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한국의 전략 (2003. 5. 30)

그러나 IT허브국가론은 전략추진의 개념과 목표 및 주체 등의 설정과 관련된 담론 구조의 한계로 인해서 21세기 세계질서의 변화, 즉 지식/네트워크의 등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IT허브국가론은 경제·산업 중심의 평면적인 IT론에 바탕을 두고, IT인프라, IT산업, R&D 분야 등과 같은 2~3개 층위에서의 교류·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가지 수사에도 불구하고, IT허브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외교 등을 포괄하는 IT의 입체적 다층위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IT허브국가론에도 제도와 규범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모두 경제·산업 발상의 연속선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차적인 맥락에서 제도와 규범의 정비를 논하는 식이다. IT허브국가론의 이러한 접근은 산업화시대 ‘제조업 기반’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연장하는 선상에서 한국이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에서 보인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화시대 동북아의 통신망 허브가 되겠다는 자신감을 반영한다.

또한 IT허브국가론은 많은 부분에서 2차원적 ‘중심(center)’과 3차원적 ‘허브(hub)’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 분야에서의 중심에 대한 논의가 IT와 네트워크의 영역에 오면서 허브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지만, 굳이 허브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중심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현재의 IT허브국가론은 영토성(territoriality)의 관념을 바탕으로 개념화된 2차원적 구상이며, 평면적 공간 활용을 염두에 둔 중심-주변(center-periphery)의 이분법적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2차원적 중심의 발상은 IT허브국가론이 경제·산업 등과 같은 사회의 물질 기초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른다. 물질적 자원으로서의 물류와 자본의 흐름에 대한 구상을 넘어서 비물질적인 지식과 정보의 활동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자 했다면, 이것이 다름 아닌 3차원적 ‘허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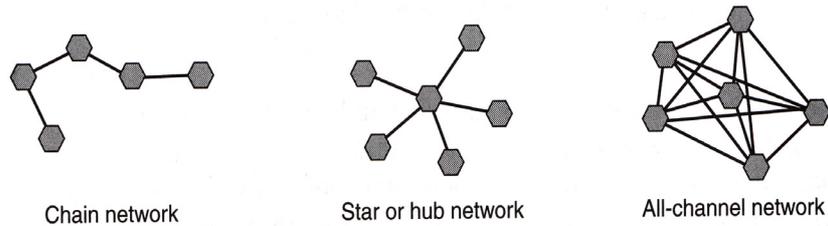
또한 IT허브국가론은 19세기 이래 지속되어 온 국민국가의 모델에 입각한 부국강

병(富國強兵) 담론의 연속선상에 있다. 다시 말해, IT허브국가론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중상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강자의 논리를 추수하는 일류국가의 강박관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IT허브국가론은 종전의 소위 'IT강국론' 또는 '인터넷부국론' 등이 국제적 환경으로 확장되면서 옷을 갈아입은 개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부국강병론적 발상이 가지는 잠재적 문제점은 그것이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의 사고를 상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두 자신이 중심(또는 허브)이라고 우기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주변의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결국 새로운 구상되어야 할 IT허브국가론의 과제는 자기중심적 발상을 넘어서 동북아 역내(또는 세계) 구성원 모두의 번영을 위한 공존의 비전을 제공하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2. 네트워크국가 발상의 필요성

이러한 모색의 첫 걸음으로서 IT허브국가론이 상정하고 있는 허브형 네트워크의 발상을 넘어서야 한다. [그림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에는 사슬(chain)형, 허브(hub)형, 전방위(all-channel)형의 세 가지 기본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IT허브국가론이 상정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바로 허브형 네트워크이다. 그런데 정보화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물적·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양상을 보면, 허브정보다는 전방위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적인 전방위 네트워크상에서 허브는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주변의 스포크(spoke) 또는 다른 노드(node)와의 관계설정 속에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설정 속에서 각 노드들은 특정한 위상을 부여받고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면서 전체 네트워크의 일부분으로서 작동하게 된다. 인터넷이 바로 이러한 전방위형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5-1〕 네트워크의 세 가지 기본형태



출처: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2001), p.8

만약에 한국의 외교전략이 네트워크전략을 구상해야 한다면, 바로 이러한 전방위형 네트워크를 준거로 하여 그 아키텍처와 작동원리의 내용을 채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의 비전은 다층적인 국제분업론을 바탕으로 동아시아(또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역할을 상징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비전에서 한국이 담당하는 노드가 다른 노드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방위형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담당하게 될 ‘경쟁과 협력의 동시적 전략’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가치노드(value nodes)’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제품의 유통망으로서의 사슬형 네트워크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s)’¹¹²⁾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듯이, 전방위형 네트워크에서도 ‘가치노드’라는 개념을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노드의 개념이 가지는 유용성은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노드의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즉, 이러한 가치노드의 전략은 네트워크의 특징인 공존공영(共存共榮)의 협력전략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역할분담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노드를 차지한다는 경쟁전략의 성격도 동시에 갖는다.¹¹³⁾

112) 가치사슬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Gary Gereffi, “Capitalism, Development and Global Commodity Chains,” in Leslie Sklair, (ed.), *Capitalism and Develop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4), pp.211~31

요컨대, 지난 1년 여간 진행되어온 IT허브국가에 대한 전략구상들은 나름대로의 형체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단편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총체적인 그랜드 디자인에 입각하여 조율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사실 현재의 IT허브국가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체지식’의 결집이라는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T허브국가론의 각론들은 각기 설정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식/네트워크 외교의 담당부처가 나서서, 실무 경제·기술부처와 공조를 펼치면서도, IT허브국가의 그랜드 전략(grand strategy)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113) 이러한 가치노드의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상배, “동북아 IT허브 건설전략: 비판적 검토”를 참조.

제 6 장 종합 및 결론

제 1 절 IT시대 디지털외교의 부상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화된 환경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의 활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통신망과 설비들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정보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식의 생산·활용·공유가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정보혁명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혁명의 영향은 최근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 걸쳐서 널리 미치고 있으며, 외교 분야에서도 외교의 과정·영역·주체가 변화하는 현상이 목격된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외교에 대한 국내외 국제정치학계 논의는 아직도 초보적인 수준이며, 몇몇 존재하는 연구도 미국의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보화시대의 한국외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기 위한 준거점으로서 정보혁명이 야기하는 외교의 변화를 일반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제시하였다.¹¹⁴⁾

정보화에 따른 외교과정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외교업무 처리의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IT인프라의 구축과 전산시설의 확충 및 외교정보 네트워크의 개설 등과 같은 ‘외교정보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외교정보화는 외교부처 내부나 재외공관을

114) 정보화시대의 외교에 대한 연구로는 미국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외교(digital diplomacy)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행본으로 출판된 기초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조. Wilson Dizard, Jr., *Digital Diplomacy; U.S. Foreign Policy in the Information Age* (Westport, Conn.: Praeger, 2001); 한편 USIP(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의 버추얼외교(virtual diplomacy) 시리즈도 정보화시대의 외교에 대한 선구적인 작업을 담고 있다. USIP의 홈페이지인 <http://www.usip.org>를 참조; 또한 정보화시대 외교(外交, diplomacy)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36(3), (2002, 가을), pp.269~88를 참조.

연결하는 전용선을 구축하여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외교부처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디지털화, 비자신청과 여권발급 업무의 전산화, 본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계 효율화 및 전자결재의 상용화, 재외국민 민원업무 통합관리체제의 구축 등이 외교업무 정보화의 주요 사업들이다. 이러한 외교정보화의 궁극적 목적이 외교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외교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있음은 물론이다.

외교정보화에 있어서 특히 인터넷이 야기하는 외교과정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새로운 세계정치공간 또는 외교공간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을 창출하고 있다.¹¹⁵⁾ 최근 들어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디지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외교지식의 적극적 활용이 외교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실공간의 공식·비공식 외교채널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외교정보와 지식의 처리과정은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 이미 인터넷은 외교 정보수집의 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외교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로서 외교지식을 창출 및 확산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외의 웹페이지에 떠 있는 정보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상대국의 정책의도와 국내외 여론의 향배를 파악하는 작업은 벌써 중요한 외교업무가 되었으며, 웹페이지를 통해 외교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위 ‘사이버외교(cyber diplomacy)’도 필수불가결한 외교과정의 일부로서 등장하고 있다. 요컨대, 정보와 지식을 적극 활용하는 외교 분야의 ‘지식경영,’ 즉 지식외교가 새로운 외교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외교과정에서 생산·활용되는 지식은 그것이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널리 공유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외교정보의 디지털화나 지식화가 단순히 양적인 정보처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정보처리 과정, 즉 가치와 신념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지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115) 하영선(편),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베스트 사이트 1000 해제』 (서울: 이슈투데이, 2001)

상징적 지식의 전세계적 전파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의 등장은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고 있다.¹¹⁶⁾ 다시 말해, 인터넷의 보급은 외교의 대상과 영역이 전통적인 의미의 여론 주도층으로부터 보다 넓은 의미의 대중 일반에까지 확대되는 데 기여하였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도처의 대중에게 자국의 정책을 홍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소위 ‘연성권력(soft power)¹¹⁷⁾’ 행사의 채널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한 정책홍보의 차원을 넘어서 정책논리를 뒷받침하는 고급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자국의 각종 문화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소개하는 웹사이트의 개설과 운영이 지식외교로서의 공공외교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으로 외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온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에서도 발견된다. 현대 세계정치에 있어서 기술·정보·지식은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 권력자원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정보·지식이 부국강병(富國強兵)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은 ‘권력이동(powershift)¹¹⁸⁾’ 즉 권력의 중심이 군사와 경제에서 지식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술·정보·지식과 관련된 국제적 경쟁과 협력의 영역은 외교행위의 핵심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정치군사적 현안에 못지않게 기술이전,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디지털콘텐츠 등의 쟁점들을 둘러싼 소위 IT외교는 최근 들어 부쩍 국가차원의 외교적 대응을 요구하는 ‘지식주권’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식외교의 분야는 정보화시대 세계지식질

116) Rosaleen Smyth, “Mapping U.S. Public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5(3), (2001), 421-44; Stephen Johnson and Helle Dale, “How to Reinvigorate U.S. Public Diplomacy,”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April 23, 2003), 1-14.

117) Joseph S. Nye, Jr.,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1990)

118) Alvin Toffler, *Power Shift* (New York: Bantam Books, 1990)

서의 새로운 ‘게임의 규칙’의 설정을 놓고 벌어지는 첨예한 경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¹¹⁹⁾

그런데 이러한 지식외교의 영역은 전문화·세분화되어 직업외교관들이 모두 떠맡기에는 벅찬 지식집약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더군다나 해당 외교정책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외교정책결정의 주요과정으로서 이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거나 차후 정책수행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는 일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결국 지식외교는 더 이상 외교전담부처 또는 국가영역에만 배타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으며, 실제로 다양한 기업이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이하 NGOs)의 민간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외교주체의 네트워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화시대 외교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인 ‘네트워크외교’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식외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영역의 테두리를 넘어서 시민사회영역의 사회단체, 기업, 학계 등의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엮어내는 외교적 거버넌스(governance)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국제기구,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을 모두 참여시켜서 만들어내는 ‘공공정책 네트워크(public policy networks)’의 필요성도 제기된다.¹²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외교의 등장에 있어서 IT의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어떠한 IT보다도 인터넷의 활용이 민간전문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들은 기존에는 국가만이 독점하던 고급 기술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

119) IT가 세계정치 권력의 다층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모색』(서울: 오름, 2001), pp.305~30

120) Wolfgang H. Reinecke, “The Other World Wide Web: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Foreign Policy*, 117 (1999/2000)

나라, 때로는 국가영역을 우회해서, 자신들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 세계 도처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수집의 독자적인 연결망을 구성하고 ‘국가지식’에 대비되는 ‘사회지식’을 생산·확산·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의 양상을 보면, 특정 정책을 정당화하는 정부 또는 정부간 국제기구들의 공식적인 견해에 대항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그룹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을 교환하고 반대의 담론을 형성하는 일들이 종종 관찰된다.¹²¹⁾

IT의 보급과 지식외교의 등장은 기존 외교조직의 네트워크화도 야기한다. 정보화의 진전이 전통적인 외교조직의 위계질서와 집중형 통제구조에 도전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IT가 작동하는 네트워크적인 속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도 이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¹²²⁾ 결국 IT의 도입으로 인해 외교부처의 내부조직도 위계적인 피라미드형의 집중구조로부터 수평적 네트워크형의 조직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직구성원의 의식이나 조직문화의 형태도 이러한 탈집중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혁신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조정의 과제와 아울러 기능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지식외교의 영역에 대응하기 위한 담당부서의 개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이상에서 언급된 대내적인 차원에서의 네트워크외교의 등장은 대외적인 차원에서의 ‘네트워크국가(network state)’의 등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세계화와 정보화 등이 제기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여 국민국가(nation-state)를 중심으로 한 근대 국제체제는 최근 들어 상당 부분 재조정되는 과정에 들어섰다. 오늘날 영토국가

121) Tiffany Danitz and Warren P. Strobel. “Networking Dissent: Cyber Activists Use the Internet to Promote Democracy in Burma,” U.S. Institute of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 3, (February, 2000). http://www.usip.org/vdi/vdr/vburma/vburma_intro.html

122) 정보기술과 거버넌스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조. 김상배,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 (2001, 겨울), pp.359~76

(territorial states)로서의 국민국가의 국경은 초국가적 논리를 지닌 자본, 상품, 정보, 기술, 범죄, 질병, 공해 등의 흐름에 의해 침투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모델은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영토주권적 권위를 침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¹²³⁾ 제임스 로즈나우(James N. Rosenau)가 말하는 소위 ‘다중심적 세계(the multi-centric world)’에서 국가로부터의 권위의 분산, 정치에 대한 경제의 우위확산, 비국가 행위자나 사회운동단체 또는 기타 초국가적 집단행동의 역할 증대 등의 현상이 국민국가의 정부로 하여금 정부간 또는 정부와 기타 비국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설정의 양식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또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변경케 하고 있다.¹²⁴⁾ 결국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국가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아우르며 작동하는 ‘탈집중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국가도 그 모습을 네트워크적인 형태로 재조정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정보화시대의 외교는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지식외교와 IT외교 및 네트워크외교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지식/네트워크외교’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최근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지식/네트워크 외교전략의 모색은 이미 외교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보화시대를 맞는 한국외교의 과제는 일차적으로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수용을 위한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123) Susan Strange,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24) James N. Rosenau,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1995)

제2 절 디지털외교의 전략적 모색

본 보고서는 정보화시대 외교를 개념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외교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적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보화시대 외교의 개념은 정보기술의 적용에 의하여 발생한 외교과정의 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전신, 전화, 해저케이블 등의 도입이 외교과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듯이 컴퓨터, 인터넷, 이동통신, 위성방송 등과 같은 정보혁명의 산물들도 정보수집이나 정보보고와 같은 외교의 전통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외교업무의 처리방식이나 기타 외교관행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활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은 동시에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활약하는 버추얼공관의 가능성을 예견케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외교는 단순한 외교과정의 수단과 형태 변화만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세계정치 전반의 구조변화를 바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정보화시대의 외교 개념을 논함에 있어 전통적인 전쟁과 평화의 영역에서 국민국가의 공식 대표로서의 직업외교관들이 펼치는 외교과정의 변화만을 고찰하는 것은 왠지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정보화시대 외교 개념의 본질적인 측면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의 세계정치와 외교에서는 무엇이 목표이고 누가 행위주체인가?”라는 문제가 규명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국제정치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권력과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자원을 원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시각에서 정보화시대 외교의 개념을 포착하려고 시도하였다.

세계정치의 ‘권력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본 정보화시대의 외교는 기술·정보·지식 등의 새로운 이슈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외교영역이 ‘수평이동’하는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과 관련된 외교는 단순히 양자간·다자간 협력이라는 관계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외교에 있어 구조적 차원의 게임규칙에 해당되는 국제규범의 설정을 포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상대방의 정체성이나 가치 및 신념체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차원의 공공외교와도 연결된

다.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론적 시각에서 본 정보화시대 외교의 개념은 외교를 수행하는 조직의 내부구조나 여타 정부부처들과의 관계 및 국가-시민사회 관계가 보다 탈집중적인 형태로 변화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보화시대의 외교는 전통적인 국제관계이론이 상정하고 있던 국민국가 중심의 국제정치를 넘어서 탈집중 네트워크 형태의 행위주체가 새로이 등장하는 세계정치의 무대를 배경으로 하여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보화시대 외교의 변화를 논함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분야의 변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일면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창기의 많은 정보기술이 미국의 기업과 정부의 연구기관에 의해 개발되었고, 정보산업의 부상과 디지털경제의 도래도 미국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또한 군사안보 분야에 정보혁명의 산물을 도입하는 데 앞서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이러한 정보화의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보화시대의 문화 분야에서 소위 연성권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우세를 바탕으로 군사,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자신들의 '구상'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이해(利害)'를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외교는 미래전략적인 차원에서 정보화시대를 맞는 외교의 심층적인 변화를 좀 더 미리 읽어내고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단 명백한 것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벌어지는 세계정치의 구조변화라는 상황에서 근대적인 형태의 외교가 일정정도의 자기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본 보고서에서 앞서 언급한대로 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한국외교도 대내외적인 차원에서 보다 넓은 영역의 비전통적 이슈들을 포괄하여야 하며, 보다 많은 비국가 행위자들을 엮어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화시대 한국외교의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외교의 형태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식의 전망은 금물이다. 기술의

발전에 적응하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이 끊임없이 재조정되어 왔듯이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아서도 외교는 개념적·현실적 재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예견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정치학에서 ‘외교’라는 개념으로 지칭되어온 기능이 세계정치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외교가 과거 19세기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 길은 미국외교가 주도하는 변화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정보화시대 외교가 갖는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냉철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남보다 한발 앞서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서 한국외교는 그 내용과 추진체계를 시급하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교분야의 정비작업에 있어서 정보화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동시에, 역으로 한국외교의 내용과 체계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외부적인 도전이다. 그러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해 점점 더 복잡화되고 정교화되는 외교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간 외교의 발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음이 명백하다. 오직 지식/네트워크의 발상을 바탕으로 한 외교의 적절한 위상설정을 통해서만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외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를 이용한 지식/네트워크 외교전략의 모색에 대한 몇 가지 단상을 제시하면서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여태까지 추진되어온 외교통상부의 외교정보화를 정부 전체의 전자정부 사업 일반에 ‘글로벌 지향성’을 가미하는 형태로 격상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03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평가사업에 나타난 것처럼 18개 전자정부 과제의 한 부문으로만 외교정보화를 설정한다면 외교분야는 항상 중하위권의 정책우선순위를 배정받을 수밖에 없다.¹²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네트워크 외교전략의 추진은 일 부처 수준의 외교정보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125) 한국전산원, 『외교정보화 사업 평가자료』

다. 21세기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종합구상에 입각해서 국내적으로 설정된 정보화전략의 기조를 변환하는 재조정을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생산되는 디지털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지식을 생산·활용·공유하는 외교의 발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한국외교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외교와 그렇지 않은 외교의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지식의 생산·활용·공유과정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한국외교도 이러한 메커니즘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지식외교의 우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식외교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탐구의 작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성숙을 통해서 달성한 ‘안의 네트워크’의 풍부함을 외교전략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정보화 분야의 대외협상에 대한 논의나 WSIS의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받는 인상 중의 하나는 외교분야에서도 시민사회의 역량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숙한 시민사회는 전통적으로 외교를 담당해온 국가영역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대립관계로서 그 위상과 역할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 측에서도 시민사회의 외교적 역할을 보완적인 관계로 설정하기보다는 견제와 회피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면이 없지 않다. 네트워크 외교전략의 일차적인 주안점은 사회각계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생산되는 외교지식을 조정하여 나라 전체의 역량강화로 연결시키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네트워크외교의 대외적 구현과정에서 국내의 청중을 넘어서 세계의 청중도 고려하는 ‘양면전략’의 발상이 필요하다. 실제로 IT허브국가론과 같은 대외전략 구상은 그 주된 용도가 대외용이라기보다는 대내용의 성격이 강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IT허브국가론(실제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이 발표된 이후 동북아시아의 주변국가들이 보여주었던 냉소적 반응은 한국외교의 전략구상이 갖는 편협성을 반증한다. 사실 중심이니 허브니 하는 용어를 정보화전략의 화두로 채택하게 된 배경

을 살펴보면, 대국민 정책홍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기술·정보·지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안과 밖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고려하는 외교전략의 발상이 없이는 네트워크 외교전략의 성공은 보장될 수 없다.

요컨대, 세계화와 정보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세계는 한국외교로 하여금 생존전략의 아이템으로서 지식/네트워크 외교를 꼽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을 둘러싼 안과 밖의 유기적인 네트워크화가 새로운 ‘문명표준(standards of civilization)’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한국외교의 한계와 가능성을 진단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배. 2001a. “정보기술경쟁의 국제정치경제: 새로운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 편, 『정보사회와 정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오름.
- _____. 2001b. “정보화시대의 거버넌스: 탈집중 관리양식과 국가의 재조정,” 『한국정치학회보』 35(4).
- _____. 2002a, “정보화시대의 외교: 개념화의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36(3), (가을), pp.269~88
- _____. 2002b, “정보화에 대한 대응: 한국형 정보화전략의 모색을 위한 시론,” 『21세기 도약을 위한 세계화 전략: Upgrade Korea』 제8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10. 18)
- _____. 2002c. “지적재산권의 세계정치경제: 미·일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2(2), pp.111~130
- _____. 2003, “동북아 IT허브 건설전략: 비판적 검토,” 제1차 한국학술연구원, 『코리아포럼』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한국의 전략 (5. 30)
- _____. 2003, “사이버공간의 미래전략: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윤영관·유석진(편), 『정보화의 도전과 한국: 여섯 가지 쟁점과 미래전략』 한울, pp.170~218
- 나향렬, 2002, “트랜스유라시아네트워크(TEIN)의 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 제14권 1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남장근·사공목, 2001, “e-Japan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 서보현(외), 2003,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 SIS) 대응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외교통상부. 2003. 『2004년도 외교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안)』 3월.
- _____. 2001. 『중장기 외교정보화촉진 기본계획(2002~2006)』 11월.
- 정보통신부. 2002. 『e-Korea Vision 2006: 글로벌 리더, e-Korea 건설을 위한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4월.
- 하영선 편. 2001. 『사이버공간의 세계정치: 베스트 사이트 1000 해제』 이슈투데이.
- 한국전산원, 2003, 『외교정보화 사업 평가자료』 9월
- _____, 1998, “1998년도 세계 정보화 추진현황과 추세,” 『정보화동향분석』, 5권 22호.
- Anderson, M.S. 1993. *The Rise of Modern Diplomacy 1450~1919*.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Brown, Sheryl J. and Margarita S. Studemeister. 2001. “Virtual Diplomacy: Rethinking Foreign Policy Practice in the Information Age,” *Information and Security*, 7.
- Castells, Manuel. 1996.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Malden, MA: Blackwell.
- Cincotta, Howard, 2001. “Post-Modern Diplomacy and the New Media.” i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 The Magazine on Information Impacts. The Center for In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July).
http://www.cisp.org/imp/july_2001/07_01cincotta.htm
- CoBra, 2004, “eGovernment beyond 2005: Recommendations for modern and innovative public administration by 2010” IP/04/1167.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2, “eEurope 2005: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 COM(2002) 263 final.
- Cooper, Jeffrey R. 2001.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lications for Content and Conduct.” i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 The Magazine on Information Impacts. The Center for In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July).
http://www.cisp.org/imp/july_2001/07_01cooper.htm

- Danitz, Tiffany, and Warren P. Strobel. 2000, "Networking Dissent: Cyber Activists Use the Internet to Promote Democracy in Burma," U.S. Institute of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 3, (February).
http://www.usip.org/vdi/vdr/vburma/vburma_intro.html
- Der Derian, James. 1987. *On Diplomacy: A Genealogy of Western Estrangement*. London and New York: Basil Blackwell.
- Dizard, Jr., Wilson. 2001. *Digital Diplomacy: U.S. Foreign Policy in the Information Age*. Westport, Conn.: Praeger.
- Drucker, Peter F. 1993.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HarperBusiness.
- Eldon, S. 1994. *From Quill Pen to Satellite: Foreign Ministries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 European Commission. 2004. "eGovernment in the EU in the next decade: the vision and key challenges," August.
- Foucault, Michel, 1980, *Power/Knowledge*, edited by M. C. Gordon, Brighton: Harvester.
- Gereffi, Gary, 1994, "Capitalism, Development and Global Commodity Chains," in Leslie Sklair, (ed.), *Capitalism and Develop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211 ~ 31
- Gibson, William. 1984. *Neuromancer*. New York: Ace Books.
- Hart, Jeffrey A. and Sangbae Kim. 2000. "Power in the Information Age," in Jose V. Cipurut, ed., *of Fears and Foes: Security and Insecurity in an Evolving Global Political Economy*, Westport, Conn.: Praeger.
- Hocking, Brian. 2001. "Diplomacy: New Agendas and Changing Strategies." i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 The Magazine on Information Impacts. The Center for In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July).
http://www.cisp.org/imp/july_2001/07_01hocking.htm
- Information Society and Management's Strategic Ability in Public Administration, 2001,

- “Information Society Programme”.
- IT Strategic Headquarters, 2004, “e-Japan Priority Policy Program-2004,” June 15.
- Johnson, Stephen, and Helle Dale, 2003, “How to Reinvigorate U.S. Public Diplomacy,”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April 23), pp.1 ~ 14.
- Kim, Sangbae and Jeffrey A. Hart. 2001. “Technological Capacity as Fitness: An Evolutionary Model of Change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in William R. Thompson, ed., *Evolutionary Interpretations of Worl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Kitschelt, Herbert. 1991. “Industrial Governance Structures, Innovation Strategies and the Case of Japan: Sectoral or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5(4).
- Kobrin, Stephen J. 1998. “Back to the Future: Neomedievalism and the Postmodern Digital World Econom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
- Livingston, Steven, 2001. “Diplomacy and Remote Sensing Technology: Changing the Nature of Debate.” in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iMP: The Magazine on Information Impacts. The Center for In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July).
http://www.cisp.org/imp/july_2001/07_01livingston.htm
- Mathews, Jessica T. 1997. “Power Shift: The Age of Non-State Actors.”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 Millard, Jeremy. 2003. “ePublic services in Europe: past, present and future,” August.
<http://europa.eu.int/idabc/en/document/3577/5671>
- Morgenthau, Hans J. 1948.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 Nicolson, G. Harold. 1969. *Diplomac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Jr. Joseph S. 1990.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New York: Basic Books.

- Nye Jr., Joseph S. and William Owens. 1996. "America's Information Edge," *Foreign Affairs*, (March/April)
- OECD. 2003. "The eGovernment imperative: main findings," Policy Brief, March, http://www.oecd.org/publications/Pol_brief
- 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1998, "Electronic 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e Citizen," February.
- Reinecke, Wolfgang H. 1999/2000. "The Other World Wide Web: Global Public Policy Networks," *Foreign Policy*, 117.
- Rheingold, Howard. 1994.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New York: HarperPerennial.
- Ronfeldt, David and John Arquilla. 2000. "What If There is a Revolution in Diplomatic Affairs?" U.S. Institute of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 4, (February) <http://www.usip.org/vdi/vdr/ronarqISA99.html>
- Rosecrance, Richard. 1999. *The Rise of the Virtual state: Wealth and Power in the Coming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Rosenau, James N. 1995. "Governan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Global Governance*, 1.
- Rosenau, James N. 2000. "States, Sovereignty, and Diplomacy in the Information Age," U.S. Institute of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 5, (February). <http://www.usip.org/vdi/vdr/jrosenauISA99.html>
- Rosenau, James N., and J.P. Singh, (eds.), 2002,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lobal Politics: The Changing Scope of Power and Governance*, Albany, NY: SUNY Press
- Ruggie, John Gerard. 1993.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17.
- Ryan, Michael P. 1998. *Knowledge Diplomacy: Global Competition and the Poli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mith, Gordon S. 2000. "Reinventing Diplomacy: A Virtual Necessity," U.S. Institute of

- Peace, Virtual Diplomacy Series, no. 6, (February).
<http://www.usip.org/vdi/vdr/gsmithISA99.html>
- Smyth, Rosaleen, 2001, "Mapping U.S. Public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5(3), pp.421 ~ 44
- Strange, Susan. 1988. *State and Markets*. London: Pinter Publishers.
- Strange, Susan. 1996. *The Retreat of the State: The Diffusion of Power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ffler, Alvin. 1990. *Power Shift*, New York: Bantam Books.
- U.S. Department of Commerce, 1998, *The Emerging Economy*.
- U.S. Department of State, 2004, *IT Strategic Plan: Fiscal Years 2006 ~ 2010 Goals Paper*.
- Watson, Adam. 1983. *Diplomacy: The Dialogue Between States*. New York: New Press.
- Webster, Frank. 1995.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Executive Secretariat, 2004, "Report of the Geneva Phase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Document WSIS-03/GENEVA/9(Rev.1)-E, February 18,
http://www.itu.int/dms_pub/itu-s/md/03/wsis/doc/S03-WSIS-DOC-0009!R1!PDF-E.pdf
- Wriston, Walter B. 1997. "Bits, Bytes, and Diplomacy."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 Yoffie, David B. ed. 1997. *Competing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日本外務省, 2000, "外務省のペーパーレス化(電子化)実施計画" 平成12年5月19日. <http://www.mofa.go.jp/mofaj/annai/shocho/denshika/jissikei.htm>
- 日本外務省, 2002a, "外務省 行政手続等の電子化推進に関するアクション・プラン" 平成14年7月30日.

http://www.mofa.go.jp/mofaj/annai/shocho/denshika/action_p.html

日本外務省, 2002b, “府省内オンライン化基盤整備計画” 平成14年7月30日.

http://www.mofa.go.jp/mofaj/annai/shocho/denshika/pdfs/action_p1.pdf

05-17

IT시대의 디지털외교

2005년 2월 일 인쇄

2005년 2월 일 발행

발행인 이 주 현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인 성문화
